

중국 경제 위기로 휘청거리는 한국 경제

관련 기사 6면

KOSPI
1 980.
▼3.94 (-0.2)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청년이 아니라 재벌 기업 위한 것

관련 기사 2, 3, 4, 5, 11면



그리스를 둘러싼 국내 좌파 논쟁

7~10 면

고용허가제 11년 -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12 면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13 면

사회연대전략은
왜 공상인가?

14~15 면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러 애써야 한다

김하영

이 글은 7월 30일에 <노동자 연대> 온라인판에 처음 발표됐다. 그 뒤 박근혜의 담화문 발표, 김대환의 노사정위원장 복귀와 한국노총을 향한 노사정위 복귀 설득 등 몇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글의 논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지면에도 게재한다.

박근혜는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7월 16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을 만나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했다면 그 다음은 노동개혁’이라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지시한 것이다.

김무성은 “당력을 총동원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고, 7월 22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에 노동개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1단계 개혁과제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9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2단계 개혁방안에는 일반하고 요건 완화와 전환배치 등 인력운영에 관한 경영권 강화, 기간제와 파견제에 대한 고용 규제 개편, 실업급여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장관 이기권은 고위당·정·청 회의 바로 다음 날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을 만나 일반하고 요건 논의를 위해 임단협에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개혁의 핵심 의제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을 강조한 데 이어, 일반하고 요건 완화 문제도 수면 위로 올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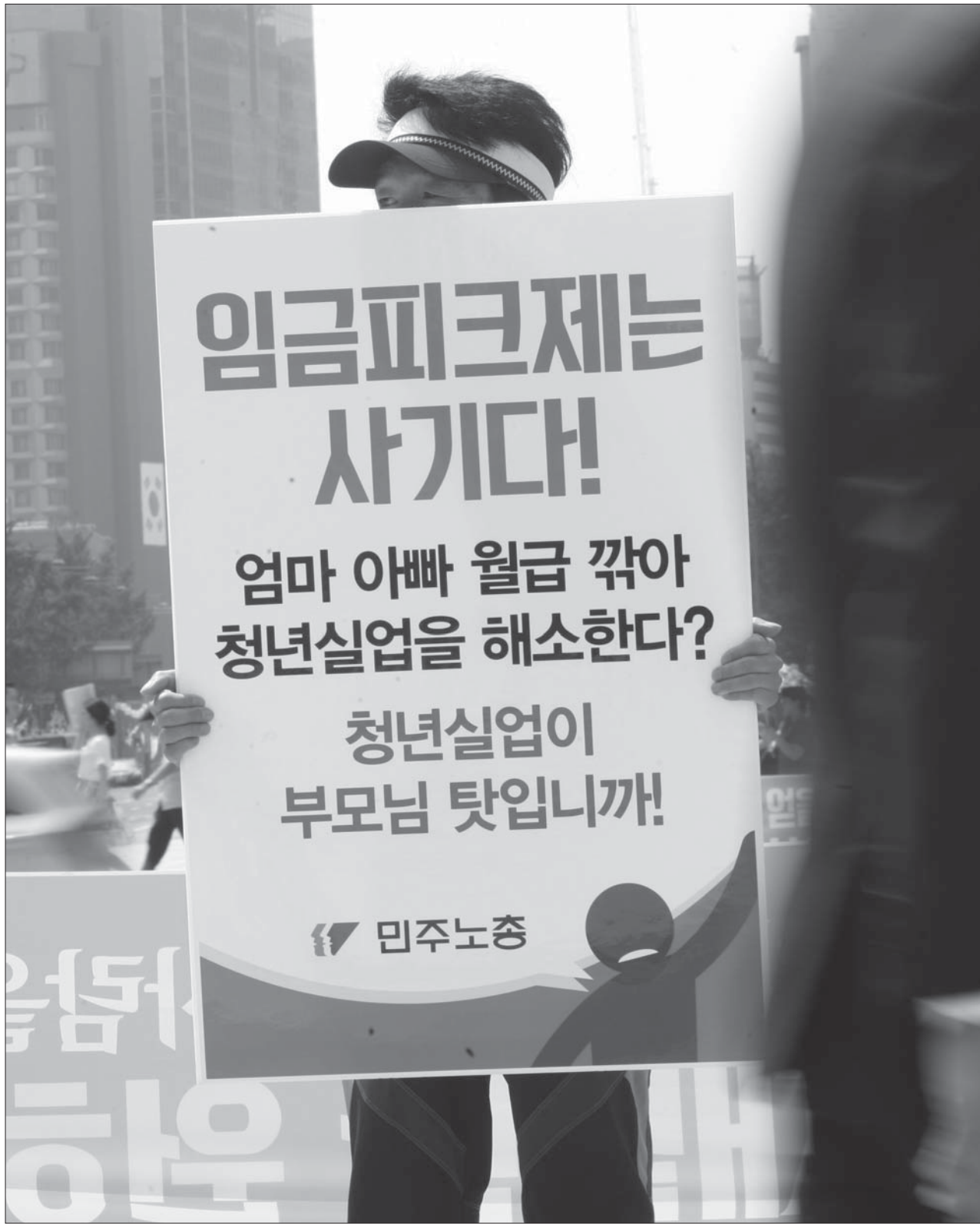
이와 같은 정부·여당의 대응은 박근혜가 필사적이고 조급하게 “노동개혁” 추진에 달려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문제와 관련해 상반기를 많이 까먹었다. 여기에는 정치적 요인(부패 스캔들, 세월호 정국, 메르스 무능 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지만, 노동자들의 저항도 한몫을 했다. 민주노총이 연초부터 투쟁에 나선 것에 영향을 받아 한국노총이 이탈해 노사정위 협상은 파탄을 맞았다.

그럼에도 상반기에 정부·여당은 박근혜 노동공세의 “최전선”이었던 공무원연금 개악을 이룰 수 있었고, 이를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이루지 못했다면,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추진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이 공무원연금 문제에 취약성을 드러냈던 것은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술, ‘철밥통·노동귀족·조직노동자 이기주의’ 공세를 앞세운 양보론,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문제 등)은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과정에서도 재현될 공산이 크다. 이에 관한 교훈을 이끌어 내려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지 150호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을 보라.)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간 이간질에 맞서야 한다.

파업 일정 미리 잡고 지금부터 조직해 나아가야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포한 만큼 민주노총의 하반기 주요 과제도 이를 저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올초 대의원대회는 11월 ‘모든 노동기본권 쟁취’ 총파업 계획을 결정했는데, 이제에는 그 전에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투쟁 계획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7월 2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정부 구조개악 강행 시 총파업 돌입” 기조 유지, “국회 논의기구” 추진 등을 결정했다.

그런데 “강행 시” 총파업 지침은 무엇을 강행으로 볼 것인지 모호한 점이 있다. 가령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 발표를 “강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발표와 법 개악안 통과를 “강행”으로 볼 것인가?

만약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발표와

법 개악안 통과를 “강행”으로 본다면, 개악안이 논의되고 날카로운 갈등이 벌어지는 중요한 순간에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파업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된다.

그러면 그 공백을 “국회 논의기구”가 메우게 되고, 중심이 거기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4·24 파업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관철된 다음 ‘뒷북치기’ 향의로는 사태를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효과적인 저항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조직됐다. 이에 따라 기층의 좌파활동가들도 두 달 가까이 현장에서 파업을 주장하고 조직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이어가야 한다. 정부의 개악 추진 방안이 발표될 9월경으로 파업 일정을 정하고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효과적일 것이다.



사전에 저항을 조직하는 게 필요하다. 7월 15일 민주노총 2차 파업.

민주노총은 9월과 10월 공공부문 파업 성사와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일에 힘을 실어야 한다.(공공운수노조 등은 9월 11일 1차 파업, 10월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또, 하반기에 임원 선거를 치르는 금속노조

를 비롯한 노조들이 선거 기간일지라도 민주노총의 파업 지침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기층의 활동가들이 선거운동을 활용해 투쟁을 주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7·15 파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총파업 ‘재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투쟁 피로증’ 얘기 속에, 11월 ‘총파업’ 계획을 ‘총궐기’로 축소하려는 기류마저 있다.

그러나 ‘개혁 피로증’이라는 말이 개혁이 잘 안 될 때 나오는 말인듯이, 진정한 문제는 파업이 효과적으로 조직되지 못한 것이지, 파업을 계획한 것 자체가 아니다.

7·15 파업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계속 늦춰지는 것과 함께 연기되면서, 뒤늦게야 촉박하게 그 일정이 잡혔다. 4·24 총파업 이후, 공무원노조 당시 집행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합의하면서, 전선이 이완되고 4·24의 탄력이 살아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바로 잡으며 투쟁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국회 논의기구 참가 추진을 우려하는 이유

이와 관련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다루는 국회 논의기구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일방 강행 저지”를 목표로 새누리당·새정치연합·정의당에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 개악안의 철회를 전제로, 노사정위가 아닌 국회 논의기구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흔히 그렇듯이, 이런 결정을 지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할 것이다. 정부의 일방 강행을 폭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부터 진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기대하는 의견까지, 또한 투쟁으로는 안 되니 국회 대응에 주력하자는 의견부터 투쟁 조직이 가능해 보이는 11월경까지 시간 벌기용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까지.

국회 논의기구 같은 제안은 복수의 상대가 있는 안이므로, 그 결과가 어떤 사람들의 기대에 근접하게 전개될지 미리 장담할 수는 없다. 각 정당만이 아니라 그 기구를 둘러싼 여러 조건들과 세력관계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노사정위가 있는데도 별도의 타협기구를 만드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며 민주노총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장대로, 일부 쟁점은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행정지침으로 추진하고 법 개정 사안은 환노위와 국회 특위에서 야당과 협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런 반응은 예상 가능했던 일이다.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에 들어오라’고 사족을 붙이긴 했지만, 한국노총하고만 대화해도 족하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 강행” 양상을 폭로하는 데 일조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근혜의 일방성과 불통은 대중에게 새삼스럽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가 진정한 관심사다.

몸값을 띄워주며 노사정위 복귀를 호소한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한 한국노총의 셈법은 무엇일까? 아직까지 한국노총은 ‘치명적 의제’(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방하고 요건 완화)를 제거하지 않으면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투쟁 압박을 넣던 지난 4월과는 달리, 사회적 대화기구 추진에 공조하는 현 상황에서는 한국노총 내에서 온건파(노사정위 복귀파) 쪽으로 힘이 실리는 역설이 빚어질 수 있다.

양보 강요

물론 정부가 워낙 강경하게 나와서 노사정위 대화 재개가 불발되고, 결국 국회 논의기구가 (변형된 형태



국회 논의기구는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 아니라 투쟁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할 수 있다.

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제안한 국회 논의기구가 만들어졌다 해서 노동자 측에 유리한 결과가 빚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종류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할 때 정부와 여당의 목적은 명확하다. 경제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양보를 설득하려는 것이다.

흔히 진보 성향의 정부가 집권했을 때 사회적 대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여기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역사적 경험을 보면, 보수적 정부 하에서도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일방적 개악 추진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자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다.

흔히 국민경제를 살리는 데 노·사·정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런 기구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가령 정부가 기업 편만 들지 말고 국민의 이익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거나, 조직 노동자들도 자신들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흔히 한다. 그러나 결국 양보를 요구받는 쪽은 거의 언제나 노동자들이다.

정부와 노동조합의 갈등이 큰 상황에서는 기성 야당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국회 논의기구에 기대하는 것도 바로 중재다.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이자 민의의 대변자로서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기성 야당은 결코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방식과 속도, 그리고 정도에 약간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개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가령 2012년 문재인은 정규직의 임금 인상 자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도 문재인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하려 하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만 강조할 뿐, 노동개혁 자체에는 분명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태도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 당시 국회 논의기구에서 새정치연합이 한 구실은 공무원노조를 설득해 양

보안을 수용하게 하는 한편, 그보다 더 형편없는 안을 새누리당과 타협하는 것이었다.

당시 정의당의 구실은 새정치연합보다 훨씬 부차적이었지만, 정의당도 공무원연금 개악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입장에 섰다.

이번에도 이 정당들은 노동자들 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설득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이런 양보를 권력자들의 고립화 전술에 맞서는 “공세적” 대응이라고 포장하며 수용하자고 나설 수 있다.

수동화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국회 논의기구로 정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보지 않고 불필요하게 타협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투쟁 동력을 장담할 수 없다고 여겨 공여지책으로 이런 정책을 지지했을 수 있다. 11월 파업까지 정부 공격을 지연시키는 전술로서 말이다.

그러나 8~9월을 국회 논의기구로 돌파하려 한다면 오히려 11월 파업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국회 논의기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무게가 실리면, 조합원들을 수동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에 무엇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개악을 반대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 투쟁을 촉진하려 해야지, 국회 대응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도자들의 협상 기술이 대중 행동을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대중 행동의 뒷받침이 전제되지 않는 교섭은 결코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8~9월 국면 돌파가 쉽지 않더라도 기층의 투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서 돌파구를 찾아야지, 황금같은 시간을 국회 논의기구 참여로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술적 활용이라며 만일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현재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투쟁에 부정적 효과를 낼 것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강동훈

지난 7월 27일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긁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은 이 대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뒷받침하는 명분 만들기임이 분명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실제 신규 일자리는 7만 5천 개뿐이고 나머지 12만 5천 개는 직업훈련이나 인턴, 일·학습병행제 같은 “일자리 기회”였다. 인턴으로 취업하고 직업훈련을 받는다고 정규직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청년 인턴제도 실패로 끝난 바 있다.

실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중 절반이 넘는 3만 8천 개(민간 3만 개, 공공 8천 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비정규직을 대폭 늘려 온 민간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로 삭감한 돈으로 청년 고용을 늘릴 거라고 기대하긴 힘들다.

간병 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포괄 간호서비스를 확대해 2년간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1만 명을 채용하겠다

는 방침은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준비되던 것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 급하게 포함된 듯하다. 그러나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인력을 필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쪼끔 늘려 간호사들의 노동강도를 대폭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또 교육 부문에서 교사 명예퇴직을 연간 2천 명씩 늘려 청년 고용을 그만큼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교원 총원은 늘리지 않고, 윗돌 빼서 아랫돌 편다는 식이다.

여성 노동자를 “반일 노동자”로 싸게 부려 먹으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시간선택제로 교사(5백 명), 공무원(4천5백 명)을 늘리겠다고 한다. 지난해 말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반대해 전국 교육대학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벌였는데도, 뻔뻔하게 청년 고용 대책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청년 고용 대책이 불안정·비정규 일자리로 꼭 차 있고, 실현 가능성마저 불투명하다는 점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진정한 관심사가 청년 고용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청년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서비스 대폭 확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게 진정한 효과적인 청년 고용 대책이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 개혁”

성지현

8월 6일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개혁’이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국책연구원을 동원해 ‘비정규직 관련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다시금 주장했다. 하반기에 밀어붙일 비정규직 공격의 군불을 지피는 것이다.

정부는 ‘2단계 노동 개혁 방안’에서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로 늘리고, 55세 이상 노동자와 관리직·전문직으로까지 파견을 확대하고 싶어 한다(현행 32개 업종만 가능). 정부가 파견 확대 대상으로 말한 관리직·전문직에는 유치원·초·중·고 교사, 기자, 기술영업원 등 4백 개가 넘는 직업이 속한다. 또, 정부는 ‘원청의 투자 지원’을 명분으로 불법 파견의 징표도 없애려고 한다.

이미 한국의 지배자들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정리해고와 파견 근로를 법제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높여 왔다. 기업주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조합을 우회하기 위해서 생산공정을 하청화했다. 구조조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퇴출당했고 그 자리를 계약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메웠다. 그래서 1997년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가했다.

비정규직 확대는 경제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인사관리전략의 변화, 그리고 이에 노동조합이 효과적

으로 맞서지 못한 결과였다.

지금 박근혜의 이간질에서도 보듯이, 이런 열악한 노동자들의 증가는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IMF 위기’ 이후 하락했다.(1996년 62.4퍼센트에서 2002년 58.2퍼센트)

탈법·위법

그런데도 기업주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고 2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시 뽑거나, 파견법의 규제를 피해 위장도급을 하는 등 법망을 피해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고 있다. 정부와 법원은 이런 탈법·위법을 눈감아 왔다.

그런데 비정규직 돌려 막기, 쪼개기 계약 등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불법파견 논란,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저들은 지금 있는 규제조차 없애고 싶은 것이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가 저들에게 이런 필요성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현대차를 비롯한 기업주들은 오랫동안 “글로벌 무대에서 고용유연성이 확보된 독일, 일본, 미국 기업들과 한 손이 묶인 채 싸움을 하란 말인가?” 하고 규제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 왔다.

역대 정부들도 끊임없이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부도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를 시도하다가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지금 정부가 군불을 지피며 하반기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하려는 만큼, 민주노총도 지금부터 이에 맞선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재벌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강동훈

민주노총 지도부는 올해 하반기 투쟁의 요구로 ‘사내유보금 환수 특별법 및 재벌 세습 금지법 제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11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로 ‘재벌 개혁’을 제안하려 하는 듯하다.

롯데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의 3대 세습 작업으로 재벌 개혁 여론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프레임은 ‘재벌 개혁’ 프레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서 7백10조 원으로 추산되는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순환출자제 금지 등으로 재벌 세습을 막고, 재벌 개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을 ‘재벌 개혁과 노동자·서민 살리기 5대 요구’의 첫째로 내세울려 한다.

그러다 보니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는 ‘재벌 개혁’보다 후순위로 밀려난 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전면에 내세워 공격하겠다고 나섰는데도 말이다.

물론 매년 수십조 원씩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는 재벌의 금고를 열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정당하다.

순환출자제

그러나 재벌 개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이런 목표 달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우선, 순환출자제 금지 등 기업 소유 구조 개편에 집중하는 재벌 개혁은 자유주의적 문제의식의 발로로, 노동자들에게는 득이 될 게 없다. 단적으로 말해, 재벌 개혁은 성공하더라도 재벌 총수 일가 수백 명이 갖고 있는 권력을 금융 자산가 수만 명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끝날 뿐이다. 새누리당조차 롯데의 순환출자 구조를 문제 삼은 것을 봐도 노동계급에게는 재벌 개혁이 얼마나 부차적인 쟁점인지를 방증한다.

둘째, 재벌 개혁 요구는 비(非)재벌 자본과의 연대라는 뜻으로 노동자들을 이끌기 십상이다.(자본 전체와 맞서 싸울 요량이라면 재벌 개혁 요구를 내세울 이유가 없다.)

사실, 재벌 개혁론은 재벌 같은 독과점이 없다면 시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그릇된 전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흔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제시되곤 한다.(이런 함정은 최근 ‘재벌 국유화’를 주장하고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을 제안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내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온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의 이민수 씨는 재벌 국유화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서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재벌을 사회화(국유화)해야 하는 이유’, 〈변혁정치〉 7호). 재벌 국유화가 자본



자본의 소유 구조 개편이 아니라 대자본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대안이다.

주의 사회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뿐 아니라 재벌을 국유화한 국가가 중소기업주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상상력이 놀랍기는 하다.)

그러나 당장, 민주노총이 하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한 최저임금 1만 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상시 업무 정규직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하려면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과도 싸워야만 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기업주에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점에서 재벌 개혁 요구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일관되게 싸우기 어렵게 하는 논리를 담고 있다.

셋째, 비(非)재벌 자본과의 연대라는 발상은 실천적으로 기성 야당과의 연대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재벌의 세금을 대폭 늘리는 데서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는 데서 새정치연합과의 연대는 전혀 믿을 게 못 된다. 새정치연합도 핵심 기반이 자본가

계급이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 전에도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 감축 논리를 내세우며 공무원노조에 공무원연금 삭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권유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속도와 방식 등에서 이견이 있을지언정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점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재벌에게 약간의 세금을 더 걷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총수 일가의 소유권 자체를 공격하거나 재벌 이윤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새정치연합에 종속되지 않고 재벌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려면 아래로부터의 독립적 계급 행동이 필수적이지만, 재벌 개혁 요구는 독립적 계급 행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이 모든 요인들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재벌 개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행동을 고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 조합원들과 대다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생활조건이 공격받는데도 지금부터 단호하게 파업을 설득하지 않고, 재벌 개혁을 내세워 국민적 호평을 얻으려는 것은 계급을 초월한 포퓰리즘적 태도다. 민주노총이 ‘재벌 개혁’을 중심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하려는 것도 이런 발상의 일환이기도 하다.

포퓰리즘

게다가 재벌 개혁 요구를 앞세우다 보면, “재벌의 세금을 일부 올릴 테니 노동자들도 ‘노동 개혁’을 받아들이라”식의 주장을 반박하기 힘들다. 청년 실업 등이 노동자 책임이 아니라 재벌을 비롯한 기업주와 정부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구조 개악 반대를 분명하게 앞에 내세워야 한다.

민주노총의 8~9월 주요 일정은 국정감사 대응, 주요 정당 설명회, 홍보전 등 재벌 개혁을 홍보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강행 시점”을 언제로 볼지

모호할 뿐 아니라 총파업 조직을 위한 8~9월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

최저임금 1만 원, 정규직 확대, 법인세 인상처럼 재벌의 이윤과 권력을 공격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도, 온갖 함정으로 둘러싸인 재벌 개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울 이유가 없다.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으로 가장 큰 득을 보는 것도 재벌들이다.

사실 재벌의 이윤뿐 아니라 소유권까지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재벌에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갖고 있다. ‘임금피크제 반대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일 뿐’이라며 이를 내세우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뒤로 미뤄놓아서는 이들이 투쟁에 나서도록 설득하고 북돋을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재벌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반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총파업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막는 것뿐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환수하는 데서도 더 효과적이다.

재벌 개혁은 왜 공상적인가?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 이후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개혁에 훨씬 못 미치는 종류의 재벌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 표피적인 ‘개혁’조차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오히려 지난 십여 년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강화됐다.

이처럼 소수 거대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내재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라고 《자본론》에서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집적은 개별 자본이 축적되

고 그래서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규모 기업은 대기업이 되고 대기업은 거대 기업이 된다.

“집중 운동”

마르크스는 집적의 심화는 자본 사이의 경쟁을 격화시켜 “집중 운동”을 낳는다고 봤다. 집중은 일부 자본이 제거되어 살아남은 자본이 전체 체제의 더 큰 부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자본들의 배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수탈이며, 다수의 소자본을 소수의 대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대자본은 더 많은 노동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데, 이는 또한 “사회적으로 결합되고 과학적으로 편성된 생산과정의 창출”이기도 하다. 요컨대 자본의 집중은 생산능력의 비약적 발전의 원동력인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반대하고 다수의 소자본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공상적일 뿐 아니라 반동적이기도 하다.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자본의 소유구조는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다. 대자본에 맞선 투쟁으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노동자 국가를 통해 집중된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통제해 대중의 삶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이다.

독일 하르츠 개혁

착취율 강화로 기업 배 불러주기 프로젝트

이현주

박근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 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시켜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부활했다는 것이다.

하르츠 개혁은 2003년에 사회민주당(SPD)의 슈뢰더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 내용이었다.

하르츠 개혁 시행 10년이 된 2015년 현재 독일의 실상은 박근혜 정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즉, 기업의 이윤 증대를 위해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려는 것이다.

하르츠 개혁은 독일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지배자들의 대응책이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잘 나가던 독일 경제는 1990년대 들어 뒤쳐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은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다른 유럽 나라들보다도 더 성장률이 낮아져서 말 그대로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다. 특히 당시 미국 경제는 1980~90년대에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등 착취율을 증대한 덕분에 일본이나 독일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

하르츠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세트인 ‘어젠다2010’은 이런 상황에서 도입됐다. 독일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을 공격함으로써 독일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영국에서는 마거릿 대처가 했던 구실을, 독일에서는 2000년대에 시민당의 슈뢰더 정부가 한 것이었다.

하르츠법 조항 중에서 특히 4번 조항(하르츠IV)이 가장 큰 공분을 샀다. 하르츠IV는 단지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것뿐 아니라 실업자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이른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실업자들은 정부의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면 실업급여가 삭감되거나 아예 못받게 됐다. 지원을 받으려면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복지 논리가 도입된 것이다.

이 정책은 시간제, 파견제 같은 저질 일자리 확대 정책(하르츠 I)과 연동됐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재 조치를 이용해 실업자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강요할 수 있었다. 또한 하르츠IV는 실업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을 길들이려는 수단이기도 했다. 실업자가 되면 빈곤해질거라는 두려움이 커지면,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이나 노동조건 악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노동자들은 하르츠법을 복지국가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하르츠법에 반대해

전후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지다

박근혜는 독일이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노사 간 협력관계”도 구축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독일 노동자들 사이에는 하르츠법에 대한 분노가 상당했다. 하르츠법 발표 직후 시민당 탈당이 잇따랐고 시민당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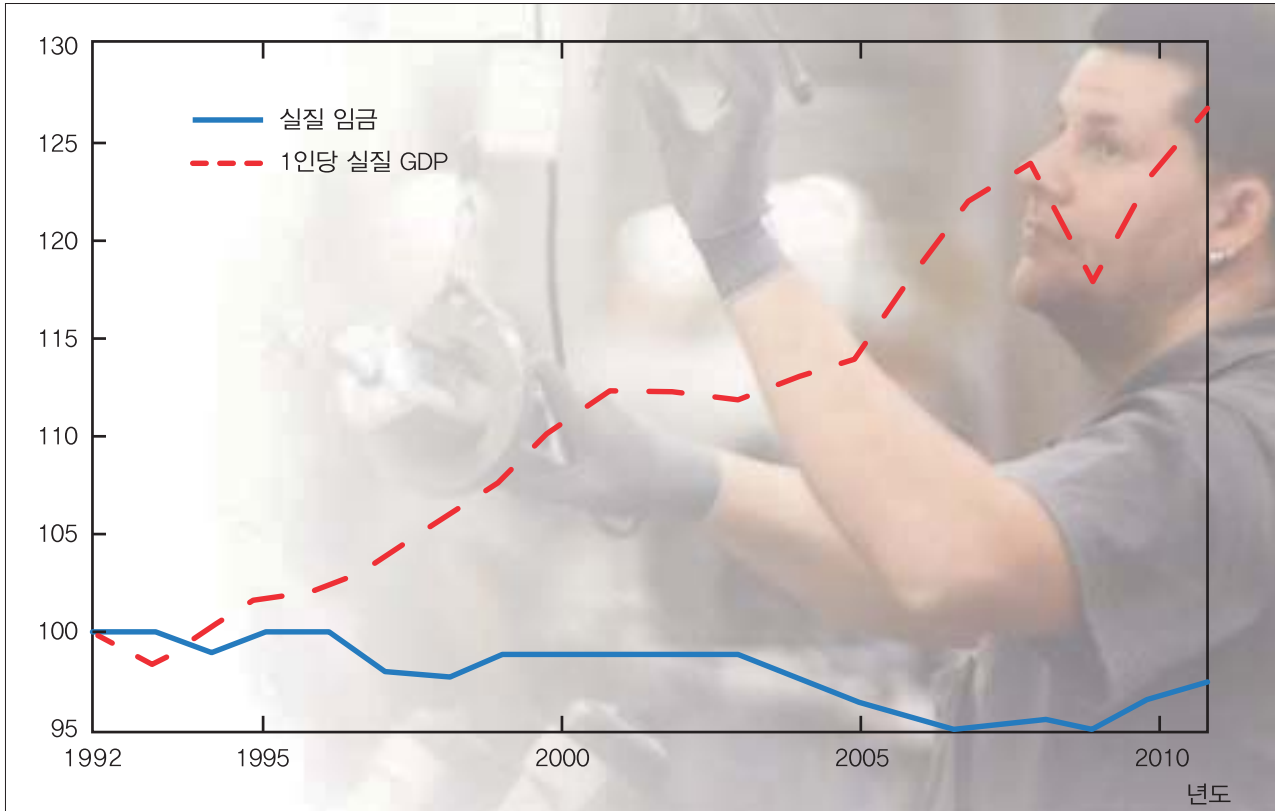


그림1. 독일의 실질임금과 1인당 실질 GDP (1992~2011)

출처 VoxEU.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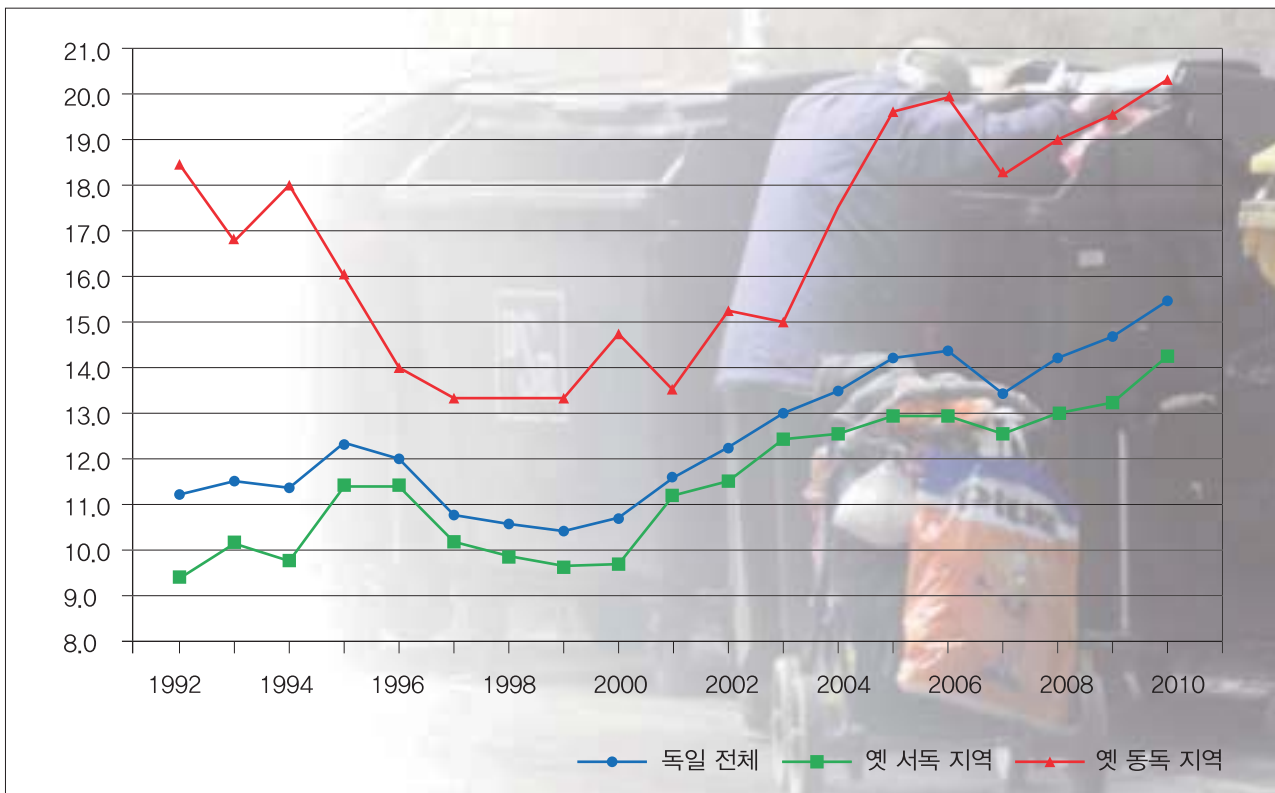


그림2. 독일의 빈곤율 (1992~2010)

출처 EUROP

지율은 곤두박질쳤다. 한 세기 넘게 이어져 온 독일 노동운동에 대한 시민당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2004년 3월 3일에는 베를린과 쾰른, 슈투트가르트와 같은 주요 도시들에서 50만 명이 하르츠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이 시위에는 금속노조(IG Metall)와 서비스노조(Ver.di) 조합원들이 대거 참가했다.

물론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시민당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시민당 정부에 맞서 행동하기를 주저했다.(심지어 금속노조와 서비스노조 지도부는 하르츠법을 추진한 노사정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시민당은 전후 독일 공산당이 영향력을 잃은 이후에 노동자 운동에 대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다. 시민당과 독일노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었는데, 시민당은 정치를 담당하고 독일노총은 경제를 담당하는 식이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2004년 3월 3일에 딱 한 번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그 뒤로는 대중 투쟁을 전혀 조직하지 않았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힘을 한

번 보여 주면, 정부가 하르츠법의 가장 나쁜 조항을 약간 고쳐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슈뢰더는 법안을 누그러뜨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슈뢰더는 시민당 정부가 위기에 빠지면 보수당이 집권할 거라고 협박함으로써,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독일노총(DGB) 지도자들은 하르츠법 반대 시위를 지지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했다.

그러나 다수 독일 노동자들의 뜻은 달랐다. 하르츠법 반대 시위는 2004년 여름에 옛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분출했다. 당시 옛 동독 지역 실업률은 18퍼센트나 돼서 이곳 주민들은 실업급여 삭감에 훨씬 더 민감했다.

시위는 월요일마다 열렸는데, 이것은 15년 전에 동독 정권을 무너뜨렸던 시위의 전통 중 하나였다. 가장 절정에 올랐을 때, 이 시위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시위는 옛 서독 지역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몇 달 만에 사그라들었다. 시민당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독일노총 지도부의 방해 속에서 시위가 더 확산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이런 저항 분위기는 서쪽

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가령 2004년 가을에 GM계열의 자동차회사인 오펔(Opel) 노동자들은 대규모 인력감축 소식을 듣자마자 1주일 동안 전격적인 파업을 벌였다. 당시 이 파업은 유럽 전체에서 연대의 초점이 됐다.

또한 2004년의 투쟁들은 그후 노동자들의 이례적인 투쟁으로 이어졌다. 2006년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서 3개월가량 파업을 벌였고, 독일텔레콤 노동자들도 임금 삭감과 외주화에 맞서 5주 동안 파업했다.

당시 하르츠법 반대 투쟁이 법안 시행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시민당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 슈뢰더는 2005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선거에서 시민당이 대패하고 나서 재선거(총선)를 선언해야 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오랫동안 시민당의 ‘표밭’이었다.

시민당은 표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하르츠법 통과 이후 몇 년 사이에 시민당 당원은 18만 명가량(전체 당원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 줄었다. 나이가 시민당에 대한 환멸과 정치적 대안 갈망 속에서 좌파당(디링케)이 등장했다. 시민당에 환멸을 느껴 박차고 나온 이들이 좌파당 창당의 주요 세력 중 하나였다.

하르츠법이 얼마나 인기가 없었던지, 2013년 9월 총선에서 공개적으로 하르츠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힌 정당은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몇몇 정당들은 하르츠 개혁을 되돌려 놓겠다고 공약했는데, 심지어 시민당도 그랬다. 말하자면 독일 시민당조차 더 이상 감히 지지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하르츠 ‘개혁’ 10년:

저질 일자리↑ 실질임금↓ 빈곤율↑

독일에서 “하르츠법”은 “가난”과 “배제”의 대명사가 됐다. 하르츠 개혁이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는 실업급여 삭감 위협을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시간제 같은 저질 일자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한 덕분이었다. 현재 독일 노동자의 4명 중 1명이 시간제 일자리에 일한다. 여성이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시간제로 일할 가능성이 더 크다. 수출 기업들은 수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시간제 노동자들을 쉽게 고용했다가 쉽게 해고했다.

오늘날 청년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이지만, 독일 노동자들은 고용 조건이 나빠지면서 실질임금도 하락했고(그림1), 빈곤율도 눈에 띄게 늘었다(그림2). 옛 동독 지역의 빈곤율은 20퍼센트에 이른다. 독일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퍼센트가 지난 몇 년 동안 가난하거나 또는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그래서 2012년에 OECD 보고서도 “독일은 유럽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올해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은 저질 일자리와 빈곤을 증대, 그리고 이를 둘러싼 불만 증대와 관련이 있다.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이렇듯 독일이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년 동안 착취율을 끌어올린 덕분이다.

지나해와 올해 독일의 노동자 투쟁은 유례없이 활발한 상태다. 가령, 독일철도 기관사 노조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철도를 마비시켜 독일 경제에 하루에 1억 유로(1천 3백억 원)에 가까운 타격을 입혔다. 지난 5월에는 한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고, 우체국 노동자와 교사들도 파업 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이런 투쟁들도 하르츠법을 비롯해서 지난 10여 년간 추진돼 온 신자유주의 정책들(철도 민영화나 병원 구조조정, 예산 삭감)이 낳은 노동조건 악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험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막지 못했을 때 노동자들의 처지가 어떻게 악화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또한 청년들의 첫 직장이 저질 일자리일 가능성이 더 커졌을 뿐,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청년실업 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보여 준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막기 위한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의 급작스런 환율 인상

세계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다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중국 인민은행이 8월 11일부터 3일 연속 위안화 고시환율을 대폭 인상해 지난 11일 이후 위안화 가치가 4.66퍼센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독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부도 위험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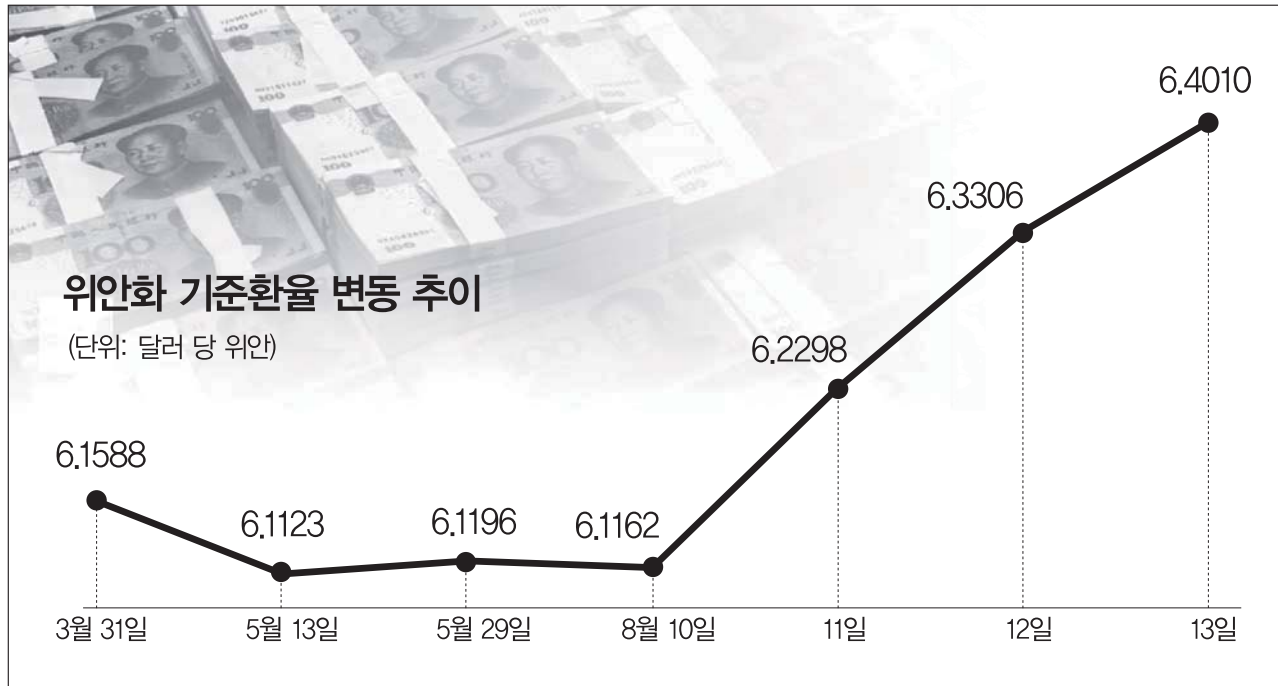
그래서 영국 BBC방송의 로버트 레스톤은 이렇게 논평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그리스 위기나 여쭙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하다. 상품 가격 하락과 신흥국 시장의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걱정이다.”

8월 13일 장샤오후이 인민은행 행장조리가 “위안화 평가절하가 계속될 여지는 없다”고 말해, 외환시장이 약간 진정되기는 했다. 그러나 중국이 급작스럽게 환율을 인상한 이유와 향후 전망을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왜 중국은 환율을 인상했을까?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고시환율을 급작스럽게 올린(그래서 위안화가 평가절하된) 첫째 이유는 위안화를 국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위안화가 기축통화의 반열에 올라서려면 우선 위안화가 IMF의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돼야 한다. 올해 11월 IMF가 위안화를 특별인출권에 편입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위안화 환율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중국 정부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다가 2005년부터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 정부가 변동 폭의 중간 가격을 위안화 환율로 공시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작한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고자 전날 은행 간 시장환율의 증가(終價)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을 위안화 고시환율에 반영하기로 지난 3월 결정했다. 그리고 이번엔 고시환율과 시장환율의 간격을 축소하려고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IMF가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를 두고 “환율을 결정할 때 시장에 더 큰 역할을 허용한 것”이라고 중국 정부를 두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안화 평가절하에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올해 8월 초 하와이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TPP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TPP 협상의 진전을 견제하고 올해 11월까지 RCEP 타결을 재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TPP 협상 참여 국가들(한국,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등)로 하여금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게 했다. 반면 RCEP에 참여하게 될 국가들은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TPP와 RCEP 참여국 모두에게 자국의 영향력을 보여 줬다.

중국 신화통신은 위안화의 평가절하 조치가 위안화의 SDR 편입을 위해 환율 시장화를 추진한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촉진을 통한 경기부양

중국이 환율을 인상한 셋째 이유는 수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바

람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최근 중국 경제는 수출 둔화와 부동산·주식 시장의 거품 붕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중국 정부는 고정자산투자*가 11.2퍼센트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15년 이래 최저치다. 7월에도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시멘트 생산은 5퍼센트 하락했고, 평판유리 생산은 13.5퍼센트, 강철은 1.8퍼센트 하락했다.

7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3퍼센트나 하락했다. 6월의 -2.7퍼센트와 견줘 이는 큰 폭이며, 시장 예상치(-1.5퍼센트)보다도 크게 밀도는 수치다.

중국의 수출이 급속히 둔화한 것은 세계경제가 침체해 있기 때문이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위안화가 14퍼센트 정도 평가절상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안화는 달러화와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 강한 달러로 인해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평가절상되고 있던 반면에 유로화나 일본 엔화는 약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미국 피를 빨아먹는다는 걸 의미한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판하지만, 뉴욕 연준 총재인 윌리엄 더들리는 “중국 당

국이 예상보다 경제가 더 둔화한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환율을 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위안화가 10퍼센트 정도 높게 평가돼 있기 때문에 위안화 평가절하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스탠다드차타드(SC)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퍼센트였지만 만약 주식시장의 거품이 없었다면 6.2퍼센트까지 하락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지배자들이 위안화를 급작스럽게 평가절하한 데에는 경기침체와 수출 부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주식시장이 거품 붕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수출가격을 떨어뜨려 주는 효과가 있다. 그 때문에 레노보, 하이얼, 샤오미 같은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유리해졌고, 중국 시장 비중이 높은 애플 같은 기업들은 불리해졌다. 그런데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 외에도 낮은 가격의 제품이 전 세계

에 확산된다는 걸 뜻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디플레 압력을 더 받게 된다. 그래서 위안화 평가절하는 환율 전쟁과 함께 디플레 위기를 수출하는 효과도 낸다.

결론: 환율 인상이 세계경제에 준 충격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수출 촉진을 통한 경기부양,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등 다목적용이라 말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갑작스런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이런 목적을 달성할지는 알 수 없지만, 세계 금융시장과 더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들은 이것이 일회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노무라증권의 아시아태평양 담당인 존 고먼이 말했다. “이번 조치는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그토록 심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조만간 또다시 위안화를 평가절하한다면 경제적으로는 환율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 디플레 위험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위상 강화 노력과 이에 대한 견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자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여러 국가의 통화들을 선택해 통화군(basket)을 구성하고, 바스켓을 구성한 통화들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각각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 통화의 환율에 이를 반영하는 환율제도.

고정자산투자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과 같은 비농업 자본투자를 말한다.





사진: 노동자(노동자) 그리스(노동자) 노동자(노동자)

7월 22일 긴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해 일어난 그리스 좌파들의 시위.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김종환

올해 초 그리스 노동자·서민의 긴축 중단 염원과 투쟁 덕분에 집권한 시리자가 이제는 스스로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보며 많은 좌파들은 당혹하여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못하거나 공허하고 추상적인 주장을 한다.

그리스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면서도 공허하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해 다음 네 가지 명제를 작성해 보았다.

1. 시리자 정부가 국민투표를 전후로 태도를 바꾼 것은 (좌파적) 개혁주의라는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다

시리자에게 열광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이었다. 이것은 시리자 지도자이자 그리스 총리 치프라스가 7월 초에 긴축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극에 달했다.

7월 초 일부 좌파는 “치프라스가 트로이카에 굴복할 것이라는 분석과 예상은 빗나갔다”(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원영수), “그리스 현 정부는 채무상환을 연기하고 당장 그 돈을 산업육성에 쏟고, 재벌들의 부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사회진보연대 한지원) 같은 희망 섞인 평가를 제시했다.

시리자의 본질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고 시리자를 지지하는 데서 생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시리자를 좌파 개혁주의로 봤다. 치프

라스의 국민투표 선언은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위로부터 압력과 그리스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 압력 사이에서 시리자가 동요하다 벗어난 결과였다. 그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반대 측이 승리하리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하면서도, 반대측의 승리가 가져올 대중의 자신감 상승을 투쟁의 전진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리자를 좌파 개혁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단지 시리자의 배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성격규정은 시리자의 집권이 그리스 노동자들의 좌경화를 반영한다는 것도 함께 말하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투항한 주류 개혁주의 세력(사회당 PASOK)을 버리고 긴축을 좌파적으로 비판하는 시리자를 택했다.

이런 분석의 실천적 결론은 좌경화

흐름을 계속 발전시킬 독립적 정치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시리자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시리자로부터 독립적인 혁명적 좌파를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시리자를 단순한 개혁주의로만 보는 초좌파들은 “개량주의의 밑바닥이 드러났다”며(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박인국) 노동자들이 간단히 시리자를 제쳐버리고 혁명적 정치로 나아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한다.

물론 혁명적 좌파는 노동자들이 시리자를 뛰어넘어 혁명적 정치로 올 수 있게 애써야 한다. 그러나 그러려면 기층 노동자들이 시리자 정부에 대해 느끼는 배신감과 당혹감, 다른 한편 여전히 기대감, 그리스 우파와 유럽 지배자들

에 대해 느낄 분노 등을 세심히 헤아려 노동자들과 관계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예컨대, 8월 11일 시리자 중앙위원이기도 한 항만노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저는 [정부의 긴축 합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미국 <리얼뉴스> 인터뷰) 그는 수년째 그리스 최대 항구인 피레우스 항구를 통째로 중국 관영기업에 넘기려는 민영화 조치에 반대해 싸우고 있고, 그가 속한 노조는 시리자가 집권한 뒤에도 강력한 파업으로 항구를 마비시킨 바 있다.

이처럼 전투적이지만 여전히 시리자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을 혁명적 정치 쪽으로 설득하는 데서 ‘시리자는 배신자다’ 하고 매도하는 것은 그들을 소원케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공동 투쟁을 하며 신뢰를 쌓을 때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

2. 그리스 경제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일부이고, 유럽연합에 남는 것은 대안이 못 된다

시리자 정부가 유럽연합에 굴복한 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논의가 많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리스 경제 위기의 원인과 떼어놓고 대안을 논의한다.

특히, 자발적 그렉시트를 대안에서 원천 배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위기의 원인을 대체로 유럽연합의 구조적 문제(부자 되는 독일과 가난해지는 그리스)나 그리스의 고질적 부패 등에서 찾는다(〈참세상〉 송명관, 〈레디앙〉 원시 등).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유럽연합이나 그리스 국내 상황을 개혁하면 그리스의 위기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경제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일부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연합의 구조를 개혁하거나 그리스의 부패를 혁파하더라도(이는 자본주의 내에서는 공상적인 해법이다), 긴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스의 혁명적 좌파들이 주장하는 ‘아래로부터 디폴트’(그리고 노동자 관리 요구의 결합)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해결책의 씨앗을 품고 있다. ‘아래로부터 디폴트’ 제안의 핵심 취지는 그리스 노동자들이 ‘더는 단 한 톨도 줄 수 없고, 이를 위해서라면 유로도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천명할 때 그

리스 국내외에서 긴축에 맞선 투쟁을 크게 고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결코 공상이 아니다. 그리스의 전 협상 책임자 바루파키스는 “그리스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표단이 특히 더 악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에서 기성 정치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적 반란 가능성은 실질적이다.

그리고 전 유럽에서 긴축에 맞선 반란이 한 단계 크게 도약하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를 겨냥한 운동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것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정치적 표현인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를 오늘날 구현하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많은 좌파들은 이처럼 그렉시트를 더 광범한 국면의 일부로 보지 않고, 또 아래로부터의 관점도 부재하다. 그래서 자발적 그렉시트 주장을 유럽지배자들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라며 기각하거나(송명관), 현실적으로 그렉시트가 대안일 것이라고 보는 듯하면서도 “사회적 유럽”이나 “인민의 유럽”을 말하며 모호하게 주장하거나(〈좌파> 안효상), 대안 논의가 뜨거워진 상황에서는 말이 없다(사회진보연대 홍명교).

▶ 10면으로 이어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의 혁명가들은 국제 연대의 정신에 충실히 하면서도, 그리스에서 제기되는 전략 문제들이 한국 좌파에게도 시사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스에서 교훈을 배우려고 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역사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차승일

 〈노동자 연대〉 153호에 실린 '그리스 경제 위기의 대안 논쟁: 그리스 민중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서 기자는 그리스의 유로존 유럽연합 탈퇴(그렉시트) 필요성과 이에 관한 논의를 다뤘

다. 그 기사의 핵심을 말하면 이렇다.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유해하다. ‘그렉시트’가 무조건 노동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유로존 유럽연합에 남아서는 진축을 중지할 방법이 없다. 투쟁을 상승·확대시킨다는 관점에

서 ‘그렉시트’는 노동자 통제 같은 급진적 요구와 결합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의 역사를 돌아보며 왜 유로존과 유럽연합이 노동자들에게 유해한지를 더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유럽 통합 구상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분석도 소개하고자 한다.

유럽 통합 과정 돌아보기

1950년대부터 시작된 유럽 통합은 당시 프랑스의 외교정책과 관련이 깊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프랑스의 교정책의 목표는 독일의 부활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소련의 세력권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유럽을 통합한다는 장기적 전망 속에 독일을 서유럽 진영에 묶어 놓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통합된 유럽에서 프랑스는 정치적 지도력을 제공하고 독일은 경제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프랑스의 구상이었다. 이 구상은 프랑스가 제안해 1951년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구체화됐다.

이런 프랑스의 구상은 당시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 미국은 두 가지 이유에서 유럽의 재건을 바랐다. 첫째, 소련 블록의 성장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서유럽 경제가, 특히 독일 경제가 성장해야 했고 유럽 국가들이 재무장돼야 했다. 유럽의 재무장이라는 목표는 북대서양조약 기구(나토)의 창설로 이어졌다. 그런데 서유럽 국가에 순조롭게 부활하려면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앙숙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했다. 1947년 6월 미국은 유럽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유럽 국가들의 상호협력력을 내걸었다.

미국이 유럽 경제의 재건을 바란 둘째 이유는 유럽 노동운동이 가하는 위협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1947년 프랑스 르노 자동차 공장장에서 격렬한 파업 투쟁이 일어났고, 프랑스 국내의 지배자들은 공산당이 집권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까지 했다. 미국은 유럽 경제가 회생하면 이런 노동운동의 압력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봤다.

유럽 통합 구상은 1957년 로마조약 체결로 이어졌다. 이 조약에 따라 유럽 경제공동체(EEC)가 창설됐다. 로마조약은 1968년까지 조인국들 간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958년 샤를 드골이 프랑스 대통령 이 되며 흐름이 약간 바뀌었다. 드골은 로마조약을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유럽 국가에 견준 프랑스의 정치적·군사적 우위를 이용해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 동맹을 구축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동맹이 점차 미국과도 어께를 나란히 하고 경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면서 1965년에는 여섯 달 동안 EEC 위원회에 담당자를 파견하지 않았다. EEC 운영 원리를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한 항의였다. 다수결 원리가 채택되면 프랑스는 비토권을 잃게 될 것이었다. 결국 만장일치 원리가 유지됐다.

공동 시장

드골은 1960년에는 두 번에 걸쳐 영국의 EEC 가입에 비토권을 행사했다. 영국이 참가하면 EEC가 점차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구가 되기 보다는 그저 커다란 자유무역 지대가 될 공산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커다란 공동 시장을 구축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나, 아니면 세력은 비교적 작더라도 정치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더 독립된 기구를 건설할 것이냐는 지금도 논쟁되는 주요 쟁점이다.

1970년대에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는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이고 둘째는 1974~75년 미국 경제가 순조롭게 부활하려면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앙숙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했다. 1947년 6월 미국은 유럽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유럽 국가들의 상호협력력을 내걸었다.

미국이 유럽 경제의 재건을 바란 둘째 이유는 유럽 노동운동이 가하는 위협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1947년 프랑스 르노 자동차 공장장에서 격렬한 파업 투쟁이 일어났고, 프랑스 국내의 지배자들은 공산당이 집권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까지 했다. 미국은 유럽 경제가 회생하면 이런 노동운동의 압력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봤다.

이에 EEC 회원국들은 1972년 ‘스 네이코’ 체제라고 불린 통화정책 조율 조치를 실시했으나 곧 실패했다. 프랑스는 유럽 통합을 진전시키려면 독일이 환율상의 부담을 더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반영해 1979년에 탄생한 것이 유럽통화제도(EMS)이다. 이 때문에 독일은 달러의 가치가 급속히 떨어지는 상황에 대응해 자국 통화인 도이치마르크의 가치를 타한층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비교적 약한 통화를 배려한 조치였 다. 이처럼 가치가 서로 다른 통화들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논쟁은 1970년대 이래 유럽 통합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었고, 2010년 유로존 위기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로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1970년대는 전후 장기 호황(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의 부산물로서 독일·일본에 견적 미국 경제의 상대적 비중이 눈에 띄게 쇠퇴한 시기가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군비 지출을 줄이고,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의 조치를 도입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공격했다. 이와 함께 기축통화인 달러 발행국으로서의 지위도 이용했다. 즉,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한 것이다.

수출에 크게 의존해 성장한 독일이 미국의 달러 약화 정책에 대응해 택할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었다. 국내 수요를 억제하고, 생산 ‘합리화’와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노동비용이 비교적 낮은 곳으로 생산을 이전해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처럼 변화된 국제 경쟁 상황에 대처하는 데서 유럽 지배자들에게 통화정책 조율 수단인 EMS만으로는 불충분했다. 유럽 각국의 경제정책을 더 깊게 조율·통합해야 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독일의 경제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각국의 경제정책을 조율·통합한다는 구상은 1983년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이 ‘현대화’ 진영이 주장한 신자유주의 처방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당시 프랑스 정부 내의 ‘현대화’ 진영을 이끈 인물은 자크 드로트였다. 드로트는 나중에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을 지냈다. 이를 반영해 1979년에 탄생한 것이 유럽통화제도(EMS)이다. 이 때문에 독일은 달러의 가치가 급속히 떨어지는 상황에 대응해 자국 통화인 도이치마르크의 가치를 타한층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비교적 약한 통화를 배려한 조치였 다. 이처럼 가치가 서로 다른 통화들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제국연합(Empire's Union).

바꿈했다. 1998년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창립됐고, 1999년에는 유로화가 도입됐다.

독일은 유럽 단일 통화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동의 재정·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 다섯 가지 기준은 1997년 체결된 ‘안정 및 성장 조약’에 담겼다. 그중 유명한 것이 정부 예산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퍼센트 이내로, 국가 부채를 GDP의 60퍼센트 이내로 억제한다는 조건이다. 1990년대 유럽 국가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긴축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노동자들의 저항이 일어났고, 유럽 통합에 대한 의론과 반감이 일었다.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된 것은 그런 정서가 반영된 결과였다.〈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소련 해체도 중요한 변화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련 블록에 속해 있던 국가들과 EEC는 1993년 유럽연합으로 탈

바이,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가입했고, 2007년에는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가입했다. 2013년에는 크로아티아가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뒤이은 나토군(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 국가들이 포함된 군사기구)의 세르비아 폭격 같은 끔찍한 아만이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소련 블록 해체 과정에서 통일을 이룬 독일은 강력한 경제력에 더해 정치적 영향력도 강해졌다. 이제 독일은 유럽 국가들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좌파들과 다수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유럽헌법을 거부했다. 유럽헌법 부결은 “20년 넘게 유럽 사회를 지배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승리였다.”

일부 좌파는 좌파 속에 유럽헌법 찬성을 주장했지만, 전체로 보아 유럽헌

법을 유럽 노동자들에게 해로웠다. 당시 한국 진보진영의 유럽헌법 찬성론자와 논쟁을 벌인 김민식은 이렇게 설명했다. “[유럽]헌법은 여성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낙태 선택권을 부정한다. 포르투갈·아일랜드·폴란드에 만연해 있는 야만적인 여성 억압 상태를 용인하는 것이다.

“또, 회원국 거주자 중 3분의 1이 시민권(투표권을 포함해)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것은 난민들에게 굳게 닫혀 있는 “요새화된 유럽”을 건설하겠다는 뜻이다.

“헌법은 회원국들의 다국적인 성격을 부인하고, 영토보전 원칙의 이름으로 피억압 국민의 자결권과 국가 없는 국민을 거부한다.

“또, 준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 유럽 공동체를 만들려 한다. 진정한 정치 권력은 정부들과 선출되지 않는 위원회 같은 기구들의 수중에 집중돼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독립성’—그 권한은 시민이나 민중에게서 나오지 않는 다—을 유지할 것이고, 기업과 주주들

레닌의 통찰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가들이 ‘유럽 합중국’ 슬로건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에 1915년 8월 레닌은 ‘유럽합중국 슬로건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했다.

레닌은 유럽합중국 슬로건이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군주제의 혁명적 고상한 도의를 설교하고, 1년에 수백만 루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백 루블은 가난한 자들에게 적선하라고 노동로 호소하는 성직자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뜻한다.”

강대국들이 서로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을 벌이며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 속성이므로 유럽합중국이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것

이 레닌의 설명이었다. “자본주의에서 다른 조직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 식민지, ‘세력권’, 자본수출을 포기한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요일마다 부자들에게 기독교의 고상한 도의를 설교하고, 1년에 수백만 루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백 루블은 가난한 자들에게 적선하라고 노동로 호소하는 성직자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레닌은 “자본가 간에, 국가 간에 일시적인 협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유럽합중국은 유럽의 자본가들 사이의 협정으로 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무슨 목적

에서인가? 오로지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공동으로 진압하기 위해,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 맞서 식민지 전리품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 현재의 경제적 기초에서, 즉 자본주의 하에서 유럽합중국은 오직 미국의 더 빠른 발전을 막기 위한 반동적 기구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대의가 오로지 유럽과만 관련 있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지나가 버렸다.”(강조는 레닌) 즉, 유럽합중국은 미국·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합을 뜻할 것이므로 반동적이라는 것이다.

크리스 하먼의 분석

2009년 작고한 영국 마르크스주의자 크리스 하먼은 1971년, 유럽 통합 구상에 관한 분석을 내놓았다.¹ 하먼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다. 그중 첫째는 유럽 통합이 국제 경쟁과 미국 자본이 가하는 압박에 대한 반작용이었다는 것이다.

규모가 큰 미디어 기술력으로 뛰어난 미국 경제는 유럽 자본들이 서로 결속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한 나라 범위의 자원만 이용해서는 미국과 경쟁할 수 없었던 유럽 자본들은 자신들 사이에 놓인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걷어 내야 했다.

미국 경제의 압력이 아니더라도 자본은 시간이 지나며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1991년 하먼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를 분석하며 자본의 집중이 세 가지 수준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² ‘일국 수준, 지역 수준, 세계 수준’이 그것이다. 하먼은 이렇게 설명했다. “한 국가가 제공하는 자본 활동의 기반이 너무 협소하면, 다른 국가들과의 동맹이나 합병을 통해 그 기반을 넓혀야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블록이 두드러지는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

하먼의 지적은 현실에서 어느 정도 입증된다. 유럽의 1천대 기업의 인수·합병 통계를 보면, 1960~70년대에는 자본의 집중이 주로 일국 수준에서 나타났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의 경제 위기를 거치며 점차 유럽적·국제적 수준의 자본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1980년대 초에는 인수·합병의 65.2퍼센트가 일국 수준에서, 18.7퍼센트가 유럽 수준에서, 16.1퍼센트가 세계 수준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1980년대 말에는 47.7퍼센트가 일국 수준에서, 40퍼센트가 유럽 수준에서, 12.6퍼센트가 세계 수준에서 일어났다.

집중과 분열

이처럼 자본의 집중 경향이 유럽 통합 진전의 이면에 있었다.

그러나 하먼은 반대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에서 말한 자본 집중의 세 가지 유형에 어울리는 정책은 각각 다르고 때로는 서로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각 정부들은 유럽 수준의 자본 집중 경향과 어긋나는 행보를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이탈리아 정부는 에어프랑스가 이탈리아 국영 알리탈리아 항공사

를 인수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탈리아 금융기업에 팔아 버렸다.

유럽 통합의 틀 안에서조차 여전히 각국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유럽 수준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들도 여전히 특정 국가에 기반을 둔 자본가 집단이 지배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정책이 자국에 기반을 둔 자본에 유리하게 되도록 애쓴다. 가장 분명한 사례가 공동 통화인 유로에 관한 정책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강력한 유로를 원하는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유로 강세 기조에 계속해서 불만을 나타내 왔다.

그러므로 전체로 보아 유럽 통합은 통합의 경향과 분열의 경향이 모두 내포돼 있는 모순된 과정 속에 있다.

1	Chris Harman, ‘The Common Market’, <i>International Socialism</i> (1st series) 49(Autumn 1971).
2	Chris Harman, ‘The state and capitalism today’, <i>International Socialism</i> 2(Summer 1991). 국역: ‘국가와 오늘날의 자본주의’, <오늘의 세계 경제: 위기와 전망>, 갈무리, 1994.

결국 유럽연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① 유럽연합은 세계 경쟁에서 유럽 자본의 이익을 지지하기 위한 기구로 출발했고 지금도 그렇다. 노동력 착취 증대가 유럽연합의 핵심 운영 원리라고 돼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체적 정책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릴 수 있지만, 노동자를 공격하는 데서는 한통속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채무 부담을 일부 완화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는 실랑이래가 있지만, 그리스가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을 하며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데서는 유럽 지배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② 유럽연합을 노동자의 이익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

다. 유럽연합의 진정한 권력은 유럽중앙은행 같은 ‘독립적인’, 즉 대중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기구들에 있다. 그리고 이 기구들은 경제 위기에 대응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보다는 취 중대가 유럽연합의 핵심 운영 원리라고 돼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그리스에서는 루카스 파파데모스가, 이탈리아에서는 마리오 몬티라는 은행가 출신의 관료들이 선거를 통하지 않고 각국의 총리가 됐다.

③ 반노동자적이고 비민주적인 유럽연합의 약화나 해체를 좌파가 안타까워할 까닭은 없다. 일부 좌파는 유럽연합을 유럽 노동계급 연대의 기초로 보지만, 유럽연합은 각국 지배자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노동자들을 공격하도록 만들고, 유럽 바깥의 노동자와 천

대반는 사람들은 배척한다. “요새화된 유럽”이라는 이민 통제 정책이 그것을 잘 보여 준다. 또, 이런 정책들로 말미암아 강화되는 이민자 배척 정책과 인종차별 사상은 극우와 파시즘이 성장하는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오히려 국제주의를 훼손한다. 유럽(더 나아가 세계) 노동계급의 진정한 연대와 단결은 유럽연합의 틀을 벗어나야 가능해진다.

* 이 글은 다음의 논문들에 많이 의존했다. Christakis Georgiou, ‘The euro crisis and the future of European integration’, *International Socialism* 128(Autumn 2010)과 Chris Harman, ‘The Common Market’, *International Socialism* (1st series) 49(Autumn 1971).

▶ 7면에서 이어짐

3. 시리자 정부의 굴복은 그리스나 유럽 노동자들의 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현재의 유로존과 유럽연합에는 비판적이지만, 유로존 탈퇴를 하기엔 그리스 민중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갖가지 여론조사를 드는 사람들도 있고, ‘1천만 국민의 민주주의의 힘의 한계’(장석준), 국제 연대를 충분히 건설하지 못한 “유럽 좌파 전체의 책임”(안효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주장들은 사실상 시리자의 굴복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리자의 배신을 그리스 노동자들의 의식 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면피용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런 주장은 구체적 현실과 맞지도 않는다.

시리자 좌파연대(Left Platform) 소속 스타시스 쿠벨라키스가 8월 3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잘 반박했다. 7월 5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그리스 주류 언론, 주요 야당, 심지어 교회까지도 나서서 ‘반대(OXI)’를 찍는 것은 유로존 탈퇴를 의미한다고 그리스 노동자들을 압박질렀다. 또, 유럽연합은 그리스 정부가 은행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가혹하게 돈을 옥죄며 ‘반대표를 찍으면 그리스는 계속 이대로 살아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도 그리스인들은 모든 여론조사 예측을 뒤집고 압도적으로 반대표를 찍었다. 이처럼 현실의 무지막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찍은 사람들의 뜻이 ‘유로존 잔류였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아전인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쿠벨라키스는 “그리스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국민투표 때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 것은 그리스 민중의 좌경화가 시리자 집권 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의 활동가 페트로스 콘스탄티누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시리자는 노동자들에게 ‘긴축 협상 끝나면 개혁을 선사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시리자가 임명한 사장을 반대하며 노동자 통제를 주장하거나(공영방송국

ERT), 시리자가 추진하는 민영화에 반대해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항만 노조). 시리자는 집권 후 계속 양보하며 후퇴했지만 노동자들은 시리자와 정반대 방향으로 급진화했습니다.”

좌경화

일부 좌파는 2012년 5월 총선에서 시리자가 제2당으로 부상한 뒤 총파업 횟수가 줄었다는 점을 들어 그리스의 급진화가 정체됐다거나(국제포럼 박

석삼), 시리자 후퇴의 배경에는 대중의 정치적 자신감 부족도 한몫한다고 주장한다(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 정주희). 이런 주장 역시 시리자의 책임을 덜어 주는 것에 뒷문을 열어 준다.

물론 시리자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선거를 기다리는 정서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파업 횟수만으로 대중의 급진화를 가능하는 것은 부정확한 인식이다. 단

적으로, 노동자들이 2012년 6월에는 ‘시리자가 집권하면 그리스는 끝장이다’는 협박에 움츠렸지만, 2015년 1월에는 그런 위협을 떨쳐 내고 시리자를 집권시켰다. 7월에는 앞서 말했듯 긴축 반대 의지를 전 세계에 표현했다. 이것이 급진화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처럼 그리스 민중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진단은 책임 전가일 뿐 아니라, 현실의 근거도 없다. 게다가 그런 주장은 그리스 노동자들이 장차 다가올 투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놓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지금 그리스 노동자들은 시리자의 처참한 실패를 보며 당혹감을 느끼고 있지만 강렬한 정치적 경험을 거친 노동자들의 급진성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앞서(명제1) 소개한 항만노조 사무총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다음 말도 했다.

“상황이 몹시 혼란스럽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긴축이 실제로 집행된다면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언제 광범한 반격에 나설지는 알 수 없다. 노동자들이 사기 저하돼 투지가 낮다면 노조 지도자들은 상징적 투쟁만 하다 투쟁을 접을 수 있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충분하다면 설령 시리자 정권의 위기를 초래하더라도 긴축 반대 운동은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관적 요인으로서 혁명가들의 개입이 중요한데, 다음 넷째 명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국가(또는 시리자 정부)를 활용하자는 주장은 계급투쟁의 발목을 잡을 뿐이고, 시리자 정부보다는 긴축 반대 운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후퇴하는 시리자, 그리고 배신자 사회당, 지배계급 정당인 신민당만이 있다면 노동자들은 싸움 의욕을 잃기 십상일 것이다. 싸워 봤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분위기는 파시스트 황금새벽당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보지 못하는 좌파들은 시리자가 “내부분열 속에 자중지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거나(송명관), 시리자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좌파연대 소속 의원들이 남아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한다(월시). 사실상 시리자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치프라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현재 그리스에는 시리자 왼쪽에서 대안이 될 잠재력이 있는 세력 둘이 존재한다. 하나는 SEK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타르시아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 공산당(KKE)이다.

그러나 그리스 공산당은 그 종파주의 때문에 대안이 되기 힘들어 보인다. 공산당은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자를 ‘자본주의가 육성한 좌파 예비군’이라고 부르며 긴축 반대 투쟁에 함께 나서는 것을 꺼려 왔다. 최근의 가장 극적인 사례는 7월 5일 국민투표가 시리자의 호소로 실시됐다는 점을 들어 기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 된 공산

당 지지자들조차 당의 방침을 거슬러 반대표를 찍었다. 종파주의는 그 당을 운동의 주변으로 밀어 놓고 있다.

반면 안타르시아는 긴축 반대 투쟁에서 시리자와 함께하면서도, 선거에서 꾸준히 독자 출마를 하며 시리자 왼쪽의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각인시켜 왔다. 안타르시아는 시리자 집권이 긴축 반대 운동의 성과라고 환영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에게 시리자 정부에 기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쟁해야 실제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 덕분에, 총선에서 시리자를 찍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안타르시아의 영향력은 커져 왔다.

따라서 그리스 긴축 반대 운동이 전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는 안타르시아와 SEK 같은 혁명적 좌파를 건설하는 것이다.

혁명적 좌파

한편, 지금 시리자 좌파인 좌파연대는 시리자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그에 따른 실천은 하지 않는다. 8월 8일 그리스의 한 일간지와 한 인터뷰에서 좌파연대의 리더인 파나지오티스 라파자니스는 분당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를 계속 회피했다.

이는 그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다보니 집권당인 시리자 밖으로 나가는 것이 곧 막다른 골목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또한 시리자 정권이 무너지면 악랄한 신민당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는 치프라스의 협박에도 흔들리는 듯하다.

라파자니스는 같은 인터뷰에서 “시리자 안에서 긴축 반대표를 던지는 것 이야말로 시리자를 지지기반과 연결해주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시리자 좌파가 그 당 안에 남아서 노동자들을 계속 시리자에 붙들어 맨다면, 이는 전체 운동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우려했게도, 1968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을 뒤흔든 노동자 투쟁이 잦아든 과정이 정확히 그랬다.

당시 프랑스 사회당, 이탈리아 공산당, 영국 노동당 내의 좌파 개혁주의자들은 노동자 투쟁을 지지했고, 좌파 개혁주의자들이 번번이 불철저한 모습을 보였지만 노동자들은 그들을 대안으로 여겼다. 그 뒤, 좌파 개혁주의자들이 체제에 흡수되고 가장 전투적으로 싸웠던 인물들이 돌변해서 ‘불만족스럽더라도 지금의 좌파 정부를 지키자’고 호소하자 투쟁이 꺾였다. 노동자들에게 독립적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

다. 투쟁 고양 과정에서 생겨난 기층의 활동가 네트워크는 산산이 흩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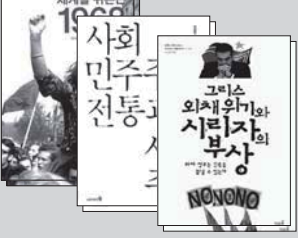
그런 점에서 시리자와 그리스 혁명적 좌파의 과제에 대해 만만찮은 분석을 내놓은 정주희(추진위 학생위원회)가 혁명가들이 자본주의 국가에 참여하는 것에 경계심을 갖지 않는 것은 큰 약점이다.

그는 좌파연대가 집권당 시리자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시리자 지도부가 대중을 실망하게 했을 경우 보다 급진적인 대안을 주장하며 이들을 대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주춧돌”이라면서 옹호한다. 또한 시리자 밖에 있는 안타르시아의 활동까지도 “시리자의 당내 투쟁에서 좌파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시리자 내부 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나 “계급지배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자가 정부에 들어가면, 부르주아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자가 부르주아 장관으로 바뀐다”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지적을 명심해야 한다. 좌파연대 사회주의자들이 시리자에서의 이탈을 머뭇거리고, 심지어 시리자 정부를 개혁한다는 미명 아래 안타르시아 일부를 견인하려 할수록 전체 그리스 운동에는 해악적일 것이다.

오늘날의 그리스 상황은 좌파 개혁주의, 세계경제 위기,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이 어떻게 혼동을 비껴가도록 해주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의 혁명가들은 국제 연대의 정신에 충실히 하면서도, 그리스에서 제기되는 전략 문제들이 한국 좌파에게도 시사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스에서 교훈을 배우려고 해야 한다.

추천도서



세계를 뒤흔든 1968

크리스 하먼, 책갈피

사회민주주의의 전통과 사회주의

최일봉, 노동자연대

그리스 외채 위기와 시리자의 부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외, 책갈피

공무원 성과급 확대는 임금 삭감 공격이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박근혜가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 임금인 연금 삭감도 모자라 이제 임금체계를 개편해 현재 임금도 삭감하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담화문 발표 직후 공무원 성과급 체계에 최상위 등급인 SS 등급*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재교육”은 물론 “퇴출”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공무원 성과급이 처음 도입된 것도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연장선”이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성과급 확대를 “공직사회 민영화”나 “직업공무원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타당하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성과급 확대 계획은 전체 노동자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오래 근무할수록 많은 임금을 주는 연공급제를 무너뜨리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한다. 연내에 공기업에 도입하겠다는 임금피크제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특히 공무원은 대표적인 연공급제로, 지배자들의 입장에서선 전체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개혁’ 대상이다. 한때 ‘공무

원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얘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을 바꾸는 등 절차가 번거로우니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공기업에 ‘취업규칙변경’이라는 꼼수를 통해 먼저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 성과급 확대는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삭감 공격의 일부이며 나아가 박근혜 정부 하반기 최우선 국정 과제인 “노동 개혁”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이런 정부가 연금 삭감을 대가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주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연금 개악 후속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 정책 개선 방안 협의기구’에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연금 개악 저지 2막”을 “공무원 인사 정책기구 활동”(〈공무원U신문〉)에 두기보다 민주노총 등 전체 노동자들과 함께 임금 삭감과 “노동 개혁”에 맞서 싸울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현재 ‘S-A-B-C’로 업무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 상위 1~2퍼센트에게는 SS등급을 주는 경쟁 방식



최근 인천 남동구청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노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공세는 박근혜의 임금 삭감 공격과 떨어져 있지 않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격은 교사들도 겨냥하고 있다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8월 6일 박근혜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노동 개혁”이었다. 박근혜는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악에 성공했고 이를 동력 삼아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공공 부문부터 적용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사·공무원에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과 교원평가 확대·강화 같은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져 퇴직 이후 소득 공백기를 우려하는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심정을 야비하게 이용하려 한다. “보수총액의 변동 없는 재정 중립적 정년 연장”(임금피크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고는 그에 맞춰 일을 더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으라는 것이다. 아니면, 정년 후 임금을 최대 절반으로 깎아 재고용하는 안도 검토하는 듯하다. (다만 이런 조치를 시행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이하 ‘인사기구’)에서 보수 체계만 논의하지, 보수 인상은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삭감된 공무원연금을 배출하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복지비를 줄이려고 더 싼 임금에 더 오래 일 시키는 정책을 사용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장년 탓으로 돌리는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청년 실업 대책이 될 수 없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면 교육 예산을 늘리고 정규 교사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교원 명예퇴직을 확대해 신규 교사 임용을 늘리고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한다(7월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 이는 고용 착시 효과를 내기 위한 알뜰한 수법이다. 시간제 공무원은 질 나쁜 비정규직일 뿐이다.

게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교육재정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 교원 정원도 축소하려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교사들의 저항을 의식해 기간제 교사를 대량 해고하는 식으로 교원 정원을 축소할 의사를 내비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이다. 전교조는 이를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성과급과 교원평가 악화

지난 7월 1일에는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시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골자는 근무성적평정과 개인성과급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연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의 질도 떨어뜨릴 것이다.

계·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교직 사회에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적용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 방향은 호봉제 폐지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이다. 그 목적은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강화해 통제를 강화하고 전체 인건비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성과상여급 평가가 승진점수에도 반영되고 임금에도 반영되면 교사들의 경쟁과 관리자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제시된 평가 기준을 보면 주당 수업시수, 수업 공개 횟수, 수업 컨설팅 횟수, 상담 실적, 생활지도 곤란도, 학년 곤란도 등 교사들의 업무를 계량화해 관리·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향후 교원의 성과연봉제와 구조조정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승진(인사)이나 성과급의

근거가 되는 능력과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교원평가다. 정부는 교원평가의 강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령으로 제정하겠다고 한다.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국가의 입맛대로 교사들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것은 물론, 교육제도의 실패를 교사에게 떠넘기고, 교원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공산이 크다.

교육과정 개악

박근혜 정부는 진작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 애썼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 했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또,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국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회교과에서는 ‘기업가의 생애 교육’을 포함하는 등 시장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을 강화하려 한다. 그리고 노골

적으로 산업(기업주)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취업 후 진학, 일·학습 병행제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문·이과 통합도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기업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기업주들에게 유용한 노동력으로 길러내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7월 21일 시행령이 발효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예절, 효도, 정직, 책임 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데, 이는 대놓고 지배계급에 순종적인 노동자의 태도를 가르치겠다는 시도다.

이렇듯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 공격과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 교원평가와 성과급 악화, 교육과정 개악 등 교사들에게 새로운 공격을 가하려 한다. 그것도 8~9월에 밀어붙이겠다고 버리고 있다.

전교조 지도부는 노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할 2심 판결 직후 조합원 연가 투쟁,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 참여를 계획하는 듯하다. 그런데 그전이라도 노동시장 구조 개악-교원평가제도 개악 저지 투쟁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교조 지도부는 8~9월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내놔야 한다. 민주노총도 박근혜의 “노동 개혁” 공세에 맞서 지금부터 실질적인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정선영

올해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정부는 지금 이주노조의 규약에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 안 되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는 꼭 철폐되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 이주노동자 유입을 관리·통제하던 산업연수제도는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의 80퍼센트를 미등록 상태로 전락시키며 실패적으로 드러났다.

그 후속작인 고용허가제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단속과 함께 도입됐다. 정부는 그물총, 가스총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인간 사냥”을 벌였다. 단속을 피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추락사로 여러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2003년 말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고용허가제 반대를 내건 명동성당 농성 투쟁은 무려 3백80일 동안 지속됐고 이 투쟁을 통해 지금의 이주노조가 만들어졌다.

단속·추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해마다 2만 명가량을 단속·추방해 왔다.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용허가제에서 이탈하지 않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이런 살인적인 탄압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며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업장 변경 사유는 고용주가 법을 위반했을 때만 가능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도 3년 동안 3회로 제한돼 있다. 또 임금체불, 폭언, 폭행, 성폭행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다. 한국어와 한국의 법률, 제도에 어두운 이주노동자가 이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다. 결국 부당한 대우를 참아 내라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노동부에 이주노동자 ‘이탈 신고’ 전하 한 통이면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나중에 고용주의 허위 신고였음이 밝혀져도 법무부는 이들의 체류 자격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해서 정주(定住: 한 곳에 자리 잡음)를 허용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 쉽게 쓰고 버리는 인력으로 취급받고 있다. 가족 동반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업연수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중 19퍼센트는 월 1백만 원도 못 받고, 74퍼센트는 월 2백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이인영 국회의원실 조사). 이주노동자 절반이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에 비해 보면 시급이 형편없이 낮은 것이다.

특히 열악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정부는 이주노조의 고용허가제 반대 요구가 '정치운동'이라며 공격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려면 고용허가제에 맞서야만 한다. 8월 12일 고용노동부 앞. 이주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농성 집회.

들은 월 평균 노동시간은 2백84시간, 월 평균 휴일은 2일, 평균 임금은 1백27만 원으로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었다. 이들 중 77퍼센트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에서 사는 등 생활 환경이 극히 열악했다. 농축산업의 여성 이주노동자들 중 31퍼센트가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경험했다(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선전하지만, 이는 완전한 위선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주장해 온 이주노조를 10년째 인정하지 않고 역대 이주노조 위원장들을 모두 표적 탄압해 추방했다.

악화되는 이주노동자 처지

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기업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악해 왔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사업장을 변경할 때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직접 고르지 못하고 사업주들의 선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해 사업장 선택 권리조차 박탈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를 방지한다며 이주노동자 송출국 정부들을 압박해 이들 정부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이탈보증금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징수할 수 있게 했다. 또 2013년 말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한 이후에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퇴직금 강탈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내 노동시장에 노동 유연화가 강화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유연한 노동력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하청 제조업 기업의 열악한 환경과 건설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 저출산,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

황에서 한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민자를 선별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종차별, 계급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돈이 많은 투자자는 아주 쉽게 영주권을 살 수 있다. 또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인력에게는 영주허용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

반면에 고용허가제 비자로는 아예 영주권을 획득할 수 없게 하는 법률을 만들려 한다. 일부 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업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 중에도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노동자들의 정주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 보호?

정부와 기업은 내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이주노동자의 고용 업종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단기 순환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양이가 쥐 생각에 주는 격이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정부의 노동시장 공격 때문에 함께 피해를 보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규제해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주장은 완전한 위선이다.

그런데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면서도 내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업종과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풀면 임금이 낮은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고용을 위협하고, 전체 임금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민 유입이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 한국 정부 자신도 이주민들이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살인적인 단속·추방과 고용허가제에 맞서 3백80일간 지속된 명동성당 농성(2004년 2월 20일).

고 인정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해 생산에 기여하고 국내에서 소비를 해 경제에 이득이 된다.

실제로 일자리 상황은 주로 경기 변화에 달려 있다. 경제 상황이 좋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면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고용이 모두 증가하고 경제가 불황이면 둘 모두 고용이 감소한다.

물론 경제위기 시기에 줄어드는 일자리를 둘러싸고 노동자 간의 긴장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며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처지를 모두 악화시키고 싶어 한다. 이런 기간질에 말려들수록 노동계급의 힘은 약화되고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은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주들에 맞서 단결 투쟁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시기에 노동조건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은 단결해서 투쟁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주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해 내국인 노동자와 단결 투쟁을 통해 처우를 개선한 사례가 곳곳에 존재한다. 금속노조 삼우정밀 지회를 비롯해 산하 여러 노조들과 건설노조 일부에서 이주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고 투쟁해 처우를 개선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2009년 금속노조의 실태조사를 보면, 당시 금속노조 사업장 2백여 곳 중 59곳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이미 민주노총 조합원들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노조로 가입시키는 노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특히 우파들은 경제위기의 속죄양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질에 대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처지 개선뿐 아니라, 한국 노동계급 전체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조에서 이주노동자와 단결을 추구해 나가는 것과 함께, 이주노조 합법화 쟁취 투쟁에 연대하고,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 추방 반대 운동에 더 크게 강력하게 연대해야 한다.

함께 참가합시다!

인종차별 철폐!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폐지!
8·30 이주노동자 행진

일시 : 2015년 8월 30일 (일) 오후 2시
장소 : 보신각

주최 :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퇴직금 공동행동 등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최미진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6)부터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2014.10)까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려 했다. 박근혜 정부가 여성 고용률 증가를 중시하는 것은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30~50대 여성의 고용률은 다른 주요 산업국에 비해 떨어진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 부분을 최대한 노동시장으로 끌어내야 전체 고용률을 높여 취약율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정부는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 고등교육 비용은 많이 드는 데 비해, 그만큼 고용률은 향상되지 않고 경력 단절로 인해 숙련도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이 낭비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는 여성 노동자의 조건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박근혜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여성들더러 단시간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육아도 병행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는 보고서를 내며 ‘단기간 내에 고용률을 끌어올리려면 시간제 비중을 높여야만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 나라들의 경험은 우리가 따를 게 전혀 못 된다. 예컨대, 독일은 OECD 국가들 중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남녀 임금격차가 큰 나라다(2012년). 특히, 하르츠 개혁 이후 단시간 일자리인 미니잡이 증가하고 주로 여성들이 이런 질 낮은 일자리에 편입돼 남녀 임금격차가 고착화되고 여성 차별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가 낳은 결과를 보면 고용의 양만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일자리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 취취 강화 위해 고용률 끌어올리려 하면서 노동조건 개선에는 관심없는 박근혜

가 늘어나면서(2005년 이후 증가한 취업자의 약 42퍼센트가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됐다), 이 부문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했다. 그런데 국가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시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새롭게 창출된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로 채워졌다.

책임 떠넘기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모두 높이려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그래서 ‘무상보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고용 정책과 마찬가지로, 보육 정책에서도 박근혜는 진정한 문제인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보육시설은 증가 추세이지만 이윤 추구가 우선인 민간 어린이집 위주로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질 좋은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15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5.3퍼센트).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에 재원을 투자하지는 않고 ‘기부채납’에 의존하려 한다.

보육의 질은 보육 노동자들의 노

동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보육교사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하루 평균 9시간 28분 근무하고 월평균 1백55만 원을 받았다. 이런 데도 박근혜는 보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관심 없다.

경력 단절로 인한 차별을 없애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후 원직복직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은 5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퇴사를 압박하는 기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육아휴직비를 늘리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기껏해야 쥐꼬리만한 육아휴직비(통상임금의 40퍼센트밖에 안 됨)를 쪼개서 4분의 1은 나중에 직장에 복귀한 후에야 주겠다는 꿈수만 내놓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비정규직 종량대책 등 노동계급에 대한 고통전가 공격들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하향평준화해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에 맞서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계로 본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

변화 속에서도 차별은 여전

최근 통계청이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 이 자료와 더불어 여성과 관련한 여러 최신 통계와 자료들을 살펴보면,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크나큰 모순 속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여러 면에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차별과 여성에 대한 희생 강요는 모습만 달리할 뿐 뚜렷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래로 15년 동안 남녀 임금격차 등 여성 차별의 핵심 내용이 거의 변함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2015년 6월 현재, 한국의 여성 노동자 수는 8백40만 명이다. 이것은 전체 임금 노동자 수의 44퍼센트에 해당한다. 여성 고용률이 여전히 50퍼센트에 못 미치지만, 여성 노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여성



노동자들이 한국 자본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노동력이라는 점이다.

가족의 생계에서 여성의 노동이 기여하는 비율도 점차 커져 왔다.

2015년 현재 우리 나라 가구 중 여성이 가구주인 비율은 30퍼센트에 육박한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비율도 45퍼센트가량 된다.

필수적 노동력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도 2009년 이래 계속 남학생을 앞지르고 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에서 여학생의 진학률이 더 높다. 학업 능력이나 교육 수준이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모두 알다시피, 여성들은 점점 더 늦게 결혼하고 아이도 점점 더 늦게 그리고 더 적게 낳는다. 2000년에는 여성 고용률이 20대 초반부터 급감하기 시작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여성들은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른다.

20대 후반 여성 노동 관련 지표를 보

면 고용률, 비정규직 비율, 임금 등 주요 항목에서 남성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한국의 20대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더 높다.

그러나 출산·육아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여성의 삶에 굴레를 씌우기 시작하는 30대가 되면 여성 노동에 대한 체계적 차별이 두드러진다. 자신의 경력과 임금을 높여 가야 할 30대에 여성들은 육아의 책임을 떠맡느라 체계적인 희생과 차별을 강요 받는다. 30대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비율은 35퍼센트나 된다. 경력 단절 후 여성들의 임금 손실은 매우 크다.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경력 단절 없는 여성보다 55만 원가량 적었다(2014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경력 단절 후 여성에게 돌아오는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20대 후

반에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36퍼센트로 남성과 차이가 없지만, 40대 이후로는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0년에 70퍼센트에 육박하다가 지금은 55퍼센트가량으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남성보다 여성이 비정규직에 더 많이 몰려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각별히 문제다. 정부의 고용률 수치 증대 작업의 일환으로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해, 2014년 현재 여성 노동자의 17.8퍼센트가 시간제로 일한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29.2퍼센트밖에 안 되고, 4대보험 가입률은 17.7퍼센트밖에 안 된다.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김문성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려고 사악하게도 노동계급 내부 이간질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이간질을 통한 각계각파 전략에 승부수를 건 만큼, 노동운동의 전략 기초는 노동계급 공통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006년 이후 온건한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개혁주의 정당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사회연대전략에 대해 <노동자 연대>가 비판적인 이유는 바로 계급적 단결이라는 핵심 과제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연대전략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계급 내부에서 임금과 노동조건 격차가 커졌다. 정규직 노동운동이 부문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이를 방지하면 계급적 단결이 어려워진다.

노동운동이 대기업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벗어나려면, 빈곤한 사람들의 이익도 함께 대변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먼저 ‘양보’해서 (즉, 세금, 각종 사회보험료, 임금 인상 자제 등으로 실질적인 임금 소득을 깎아서) 저임금 노동자들과 빈곤한 서민에게 쓰이도록 하자. 이것이 노동운동의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이고 계급 내 연대(“계급 형성”)의 길이다.

노동자가 먼저 ‘양보’하면 국민적 명분(설득력)이 생겨서 자본을 ‘설득’(압박)하는 데 유리하다.

일단 ①과 ②의 주장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자본이 강제한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와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이 단결을 위해 필요하다. 그래야 정부의 교활한 이간질에도 맞설 수 있다.



자본에 맞서 노동자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노조가 함께 사내하청노조 집단 가입 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최근 통계청 조사를 보면, 월급이 2백만 원 미만인 노동자가 9백37만 명에 이른다. 이런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도 더 심할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통상임금 확보, 최저임금 인상 등의 투쟁에 노동운동이 연대해 함께 나서는 것이 계급 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더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에게는 잘 조직된 노동운동이 박근혜의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공격을 싸워 물리치는 것이 보호막이 될 수 있고, 또 스스로 조직화하고 투쟁에 나서는 데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 그중에서도 조직 노동계급이 할 일은 정부에 맞선 투쟁에서 전체 피억압 민중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노동자 투쟁은 노동계급에 이로운 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로운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노동계급은 체제의 심장인 이윤에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 계급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 이룩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 노동계급의 구실은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위한 투쟁에서 발휘하는 힘을 작업장 밖으로 확장하는 것이어야지, 자기 투쟁을 자제하는 것이 되서는 안 된다. 상대적 고임금의 노동자가 경제 위기에도 임금 인상을 쟁취하는 것은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곳이 임금을 삭감·동결하면, 나머지 기업들에선 임금 인상 요구가 더 어려워진다.

비관론과 계급 내 격차의 과장

③과 ④의 주장은 조직 노동계급이 연대 투쟁을 하기보다는 ‘임금 소득’을 양보해 자본과의 타협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사회연대전략의 ‘연대’는 실상은 ‘소득의 나눔’이다. 이는 더 열악한 노동자와 서민뿐 아니라 조직 노동계급까지도 수동화시키는 대안이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이제는 계급 투쟁 방식으로 노동계급 내 격차를 상향 평준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비관론이 있다.

사회연대전략은 계급투쟁에 대한 비

관론 때문에 노동운동의 (개혁주의 정당과 노동조합 양측의) 상층 지도부가 골치만 아픈 임금 인상, 고용 보장 투쟁 대신 노사정 간 ‘정치적’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상이다.

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 임금 삭감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덜할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자본에게 양보 가능한 첫째 목욕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급 내 격차를 과장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연대전략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해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사회연대전략을 내세웠던 정용건 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올 1월 <사민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연대전략을 ‘복지국가 하자는 운동’이라고 요약한 바 있다.

이 관점에서는, 세금 인상 등으로 임금이 당장 깎이는 것을 감내하는 것은 전략적 양보,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인 셈이다.

그렇다면, 사회연대전략은 상대적 고임금 집단의 임금 소득을 어떻게 ‘양보’하자는 것일까? 한 기업 내 격차 해

소 문제라면, (바람직한가 하는 판단과 별개로) 정규직이 임금 인상을 포기해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는 등의 ‘직접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사회적으로는 노동계급 부분 간 임금 소득의 직접 이전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양보는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인상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경제 주체의 세금 부담을 늘리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노동계급의 세금 부담도 늘겠지만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 복지를 위한 재원이 늘어난다는 발상이다. 국가(조세정책)를 매개로 자본과 노동이 ‘사회적 연대’를 해 복지국가를 이루자는 것이다.

결국 사회연대전략은 계급간 타협에 기초를 둔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정치 전략의 다른 표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노동운동 상층이 계급투쟁을 회피해 협상 중심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입장을 반영하는 프로젝트다.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적 연대’의 약점

사실, 공동체(사회)의 복지 비용을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함께 부담하는 것을 ‘사회적 연대’로 보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의 ‘(사회적)연대’ 개념에 속한다.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사민당)의 당수를 지낸 잉그마 바르손은 이렇게 말했다.

“각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인 복지 요구다. 만약에 이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정한 권리가 되려면, 우리는 – 연대 속에서 –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연대적인 기여금을 내야만 한다.”(《사회민주주

의란 무엇인가》, 논형, 2009)

복지 제공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개인의 생계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시장 원리에 맞서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이 논리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노동계급에게도 재정 부담이 지워져야 한다는 압력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연대전략 지지자들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좌파나 현장 노동자들을 노동계급의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회연대전략이 기업주들의 “정규직 양보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계급’을 ‘국민’과 조화시키는 방식의 사회민주주의적 ‘연대’ 개념(도덕)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공동체가 내부에서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라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법률적으로는 자유롭지만 독자적인 생존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노동력을 불평등한 조건에서 판매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동등한 주체 간의 노동력 매매 계약이 현실에서는 ‘갑’과 ‘을’ 사이의 종속적 계약이 되는 이유다. 이 근원적 불평등 때문에 노동력 판매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들의 사실상 유일한 소득원이다.

이 덕분에 또한 자본가들은 노동과 정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정해진 노동시간 안에서 약속한 임금 몫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다. 자본의 이윤은 바로 이 잉여노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이윤 몫과 임금 몫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은 화해 불가능한 적대적 계급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처지에서는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복지 비용은 자본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임금의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연대전략의 ‘(사회적)연대’ 개념만

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의 복지 비용을 사회가 부담한다면,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 안에서 어느 계급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를 더 캐물어야 한다.

바로 이 문제에서 사회연대전략의 “계급 형성론”도 모순에 부딪힌다. 계급형성론자들은 소득 연대로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과 나머지 노동자들이 계급(연대)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사회연대전략의 계획상) 사회적 소득 연대에 마찬가지로 동참하게 돼 있는 자본가들과는 그런 연대의식을 형성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복지국가에 대한 착각

이런 모순들을 봐도, 사회연대전략의 포퓰리즘(계급 협력)적 '소득 연대' 프로젝트는 계급 형성은커녕 노동계급의 분열과 계급의식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사회연대전략이 계급을 가로지르는 평화로운 소득 나눔을 통해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공상적 사회주의에 가깝다. 이성과 선한 의지로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해 조화를 이룬다는 발상 말이다. 이런 공상은 자본이 설득 가능하고, 국가가 중립적이고 사회 전체를 통합적으로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다는 착각과도 연결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는 노동과 자본의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다. 국가는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돼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주관하는 외관을 띠지만, 본질적으로는 지배계급의 강제적 통치 수단이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설득으로 자본으로 하여금 이윤의 침식을 용인하도록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복지국가라는 사회적 타협 체제는 격렬한 계급투쟁이 상호 휴전한 역사적 결과물이다. 휴전이 휴전 협상가들의 산물이 아니듯이(전쟁에서 드러난 상호 세력관계의 결과물이다), 복지국가도 사회적 합의주의의 직접적



경제 위기로 공격받는 복지국가
복지 삭감에 저항하는 영국 노동자들.

산물이 아니다.

또한 복지국가라는 역사적 시스템은 노동자들의 투쟁,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장기호황, 냉전 제국주의 체제의 형성이라는 지정학적 요인 등의 구체적 배경 속에서 이뤄졌다. 즉, 특정 시점에서 당대의 계급세력균형 속에서 성립 가능했던 잠정협정(modus vivendi)이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당시의 요인들이 모두 사라지거나 변화됐다.

이런 점에서도 사회연대전략은 공상적이다. 강력한 계급투쟁 없이, 그것을 성사시킨 역사적 배경과 전혀 다른 조건에서도 당시와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바른 분석의 중요성

설사 사회연대전략가들이 투쟁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계급 간 타협을 위해 계급 내 분열을 조장한다는 결정적 약점을 댔을 수는 없다. 계급 분열의 논리는 단호한 대중투쟁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연대전략에 호의적인 대다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때 민주노총 안에서 혼란과 분열을 야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에 대처하는 좌파의 약점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노조 판료층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을 회피한다. 즉, 노사 간 협상을 전담하는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의 이해관계가 현장 노동자들의 이익·요구와 상충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결국 '대공장 노조' 지도부의 투쟁 회피를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주의와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고, 사회연대전략의 해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정규직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대립시키는 듯한 일종의 도덕주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 도덕주의는 수동적 급진주의 그리고/또는 정치적 무기력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급타협주의 세계관의 산물

인 사회연대전략보다는 자본과 맞서 싸우는 데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노동자 연대를 강화시키는 전략이 노동조건 방어에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노동자 연대는 다른 피억압 민중과 달리 이윤 생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그리하여 자본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노동계급의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 노동자 5만 명이 모두 사내하청이라 할지라도 전원이 푼뽀물 못쳐 파업한다면, 노동계급 투쟁의 파괴력이라는 점에서는 5만 명이 모두 정규직인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문제는 일부는 정규직, 일부는 사내하청, 또 일부는 촉탁직 이런 식으로 분열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계급 내 다양한 격차와 사회적 빈곤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계급 내 격차를 해소할 돈이 어디서 나와야 하냐는 물음에 올바른 답을 내놓아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저임금의 수혜자는 기업주이지, 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연대전략이 아니라 계급투쟁 전략이 노동운동의 유일한 전략인 이유다.



박근혜의 경제 활성화는 곧 규제 완화.

의료 민영화를 도울 '경제활성화 3법' 반대한다

장호중

박근혜는 8월 6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 처리를 국회에 주문했다. '3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박근혜는 이 법들을 통과시켜 의료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다른 '투자 활성화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들도 공공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들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추진법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리추구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꼼수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너무 강해 법 개정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도 '외국인 병원'이라며 의료법을 피해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국회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 보여 주듯이, 이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본가들이 보기에,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병원의 영리자회사를 설립했다가 나중에 이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협 등의 반론에 부딪혀 일부 후퇴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의료 '산업'에 투자하려는 삼성 등 대자본가들은 더 확실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다. 법 체계상 '기본법'은 다른 관련법들의 상위법으로, 이 법이 정한 '투자활성화' 조처와 충돌하는 관련법 조항들은 효력이 약해지거나 아예 그 법률이 개정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나중에 법적 공방이 벌어져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

할 수 있다. 박근혜가 지난해부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그토록 강조해 온 이유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광공업·농수축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다. 그렇게 해서 '의료 관광'처럼 다소 경계가 모호한 사업의 규제부터 허물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예컨대 대형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호텔(메디텔)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는 장차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당장은 '관광업'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할 수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이는 결코 억지 추측이 아니다. 제주도와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해 온 '외국인 병원' 관련 규제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조금씩 완화돼 왔다. 결국 지금은 국내 자본이 국내 의료진을 고용해 내국인들을 진료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리병원이 들어서고 있다. 메디텔 관련 규제도 지난 몇 년 사이 대폭 완화돼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통과에 반대해 왔지만, 결코 일관되진 않다. 반대 여론과 의료 민영화 저지 운동 때문에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던 법안을, 결국 상정하기로 합의해 준 게 새정치연합이다. '보건의료'를 빼면 통과시킬 수 있다거나 '공공의료'만 제외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식의 타협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몇 차례 논란 끝에 정부·여당은 '보건의료를 빼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보건의료 제외' 정도로 의료 민영화를 예방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경제활성화 3법'의 하나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인데, 얼핏 의료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학교 근처에 세워진 대형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명분으로 호텔을 세우려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장 삼성서울병원 인근 지역도 각급 학교들 때문에 대부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묶여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10퍼센트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빼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도 의료 관광을 명분으로 의료법상 규제를 폐지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할 수 없었다. 순전히 이윤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보험회사가 병원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서는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세울 수 있으므로 아예 병원과 협약을 맺어 영리병원처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한미FTA 등 각종 국제협약들 때문에 이런 조처는 장차 내국인에게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면 사실상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미국식 영리병원 설립에 물꼬가 트이는 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진료'도 허용하는데 이것도 장차 내국인을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광범한 반대 여론을 무시하며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법으로 금지돼 있는 원격진료를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곳곳으로 확대하고 있다.

요컨대, '경제활성화 3법'은 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악법이다.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부문의 노동조합들, 의료민영화저지법국본 등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 5백일

진상 규명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김지윤

8월 28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백 일이 된다. ‘금요일엔 돌아오라’며 기다린 딸과 아들은 하늘의 별이 됐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자식의 뺨 조각이라도 인아보고 싶다”며 가슴을 치고 있다.

참사를 둘러싼 파편적 사실들이 일부 드러났을 뿐 온전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특별조사위원회도 온갖 방해 공작에 시달리고 있다. 참사 책임자들은 처벌받긴커녕 운동을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실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7월 29일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 안전 사회 마련과 추모지원대책을 위한 82대 과제’(이하 82대 과제)를 발표했다.

82대 과제는 침몰과 구조 실패의 원인, 참사 당일 정부의 지시 사항과 대통령령의 행정과 더불어 세월호 같은 낡은 배가 버젓이 운항할 수 있었던 안전 규제 완화 조치, 해운회사와 정부의 유착·부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진상 규명을 과제로 꼽았다.

검찰이 발표하고 재판부가 인정한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도 여전하다. 최근에는 단원과 학생이 선상에서 짝은 세월호 운항 사진을 근거로 ‘조타 실수에 의한 급변침’이 아니라 엔진 문제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이 발표한 급변침 원인과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민변이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침몰 원인을 비롯해 당일 상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청해진해운 책임자들은 일부만이 솜방망이 처벌 정도를 받았을 뿐이다.

무엇보다 구조 실패의 책임을 지고 수사와 기소를 받은 사람은 목포해경 123정 정장뿐이다.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오히려 줄었고, 검찰과 사법부는 실질적 책임자들은 탈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발표했던 선체 인양은 유가족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유실방지책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드러났다. 유가족들은 인양과 관련해 점검·협의할 공식기구를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족들의 세월호 선체 수중 촬영마저 막고 있다.

이렇듯 진실 규명 요구를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 발 떼기도 힘든 특조위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진실 규명의 가장 큰 벽은 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방해이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참사를 낳은 이윤 경쟁 체제가 얼마나 부패하고 야만적인지를 드러낼 것이다. 동시에 이런 체제를 수호 강화하는 것을 존재 이유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결국 겨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할지 불문가지다.

지난 ‘쓰레기’ 시행령 강행에서도 확인했듯이 박근혜 정부는 반쪽짜리 특별조사위원회도 놔두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산 지급도 미루고, 특조위 활동 기간도 축소하려 한다.

특조위 해체 운운하며 사퇴한 여당 몫 부위원장 조대환의 후임으로 자리를 꿰찬 변호사 이현은 과거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법을 비난하는 주



꺼지지 않는 항의 운동의 불씨 7월 18일 '박근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구속과 4·16연대 탄압 규탄 촛불 문화제'

장을 폈던 자다.

정부와 우파들은 특조위 발목을 잡고 마비시키려 허위, 과장, 왜곡도 거리낌 없이 내뿜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과 사설을 할애해 특조위를 예산낭비 주범으로 몰아 흠집내기에 앞장 서고 있다. 우파 언론들이 깔아놓은 명석 위에서 새누리당 서청원은 “특조위가 돈잔치 하나”라며 팻대를 세웠다. 새누리당 시의원이 세월호 사망자들이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과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카톡을 유포한 것이 폭로되기도 했는데 그들의 세월호 운동 고립 시도가 얼마나 더러운지 또 한 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석태 위원장은 “이제는 일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파견공무원을 수용했다.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특조위 구성원들이 수용하는 모양새”(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가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유가족들과의 협의도 없었다.

시행령 반대 투쟁은 바로 이런 상황을 경고하며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다. 당장은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 돌 후퇴하다 보면, 진실 규명에서 멀어질 뿐 아니라 정부의 자신감만 높일 수 있다.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5백 일을 계기로 다시금 ‘진상 규명’과 ‘조속한 인양’ 등을 요구하며 기층운동을 건설하려 한다. 이를 위해 유가

족들이 전국간담회를 적극 조직하고 있다.

지금 박근혜는 경제·안보 전선에서 지배계급한테서도 불신을 살 정도로 불안정한 처지다. 그래서 “노동 개혁”을 통해 일점돌파 하려고 절치부심이다. 노동자들도 임금과 고용 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노동 개혁”에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다. 박근혜로 상징되듯, 노동자 착취를 증대시키려는 자들이 곧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의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에도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하자.

돌아볼 점들

지난 4월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벌어진 ‘쓰레기’ 시행령 반대 투쟁은 지난해보다 더욱 격렬하게 벌어졌다. 당시 투쟁은 이 운동이 가진 잠재력만이 아니라 ‘세월호 세대’의 등장을 확인시켰다. 또한 민주노총의 4·24 파업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투쟁 확대를 기대하게 했다. 민주노총은 파업의 주요 요구에 시행령 폐기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 시기에 폭로된 성완종 스캔들은 박근혜를 더한층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최루액 대포와 시위 참가자 무더기 연행 등 거리 시위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벌이던 박근혜 정부는 5월 21일 시행령을 기어코 통과시키고 특조위 활동 방해와 박근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구속 등 공세를 이어갔다.

기세 있게 벌어진 세월호 참사 운동을 노동자 투쟁이 이어 받아 박근혜에 제대로 맞서는 것이 불충분하면서 박근혜가 반격을 퍼부를 틈이 벌어졌다. 아쉽게도 4월 파업이 지배자들을 위협할 수준으로 확대되지 못했고, 박근혜를 압박하기 위해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투쟁을 건설하지 못했는데다가 5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둘러싼 노동운동 진영의 혼란으로 강력한 투쟁 건설 기회를 놓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메르스 무능 대처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쳤지만 노동운동은 투쟁의 기회로 삼지 못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박근혜 공격을 제여할 열쇠는 대중 투쟁에 있었고 노동운동이 진지하고 실질적 투쟁을 건설하지 못한 것이 지난 운동에서 드러난 약점이었다. 따라서 지금 박근혜 정부

의 연이은 공격의 배경을 강력한 진보 정당 부재에서 찾으며 대중 투쟁보다 국외 안 세력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두려는 것은 부적절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노동계급의 폭넓고 깊은 분노를 고려한다면,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이 고양되는 시기에 노동자들이 체제를 멈출 고유의 힘을 발휘해 싸우도록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했다. 아쉽게도 이것이 운동의 진지한 과제로 논의·실행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KBS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내건 투쟁을 건설하며 세월호 운동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안전사회 대책으로 안전산업 활성화 따위를 내놓는 박근혜 정부에 제대로 맞서려면 이윤 경쟁 논리로 고통 받는 동시에 이를 멈출 힘을 가진 노동계급이 나서야 한다.

500일

세월호 참사 500일이 다가옵니다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 국민대회

일시: 8월 29일(토) 오후 3시

장소: 서울(추후 공지)

(국민대회 이후 거리 행진,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문화제 진행)

※ 자세한 추모 주간 일정은 416act.net에서 확인 가능